

중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

An Analysis of the Economic Effect of Free
Trade Agreement with China and Korea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연 룡

중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

An Analysis of the Economic Effect of Free
Trade Agreement with China and Korea

2008 년 2 월 25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 역 학 과

연 롱

중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

지도교수 박 노 경

이 논문을 무역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7 년 10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 역 학 과

연 롱

연릉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경 상 대학교 교수 윤 주 한
위 원 경 상 대학교 교수 이 정 호
위 원 경 상 대학교 교수 박 노 경

2007 년 11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 방법	2
제3절	논문의 구성	2
제2장	자유무역협정의 실태	4
제1절	세계화의 추세	4
제2절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6
1.	자유무역협정의 정의	6
2.	자유무역협정의 형태	8
3.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추세	10
4.	지역별, 주요 국가별 FTA 체결 현황	11
가.	유럽지역	11
나.	북미지역	12
다.	중남미지역	13
라.	아시아지역	13
5.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시 경제적 효과	17
제3장	중국과 한국의 경제현황	18

제1절	중국의 일반 경제현황	18
제2절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28
제3절	중국의 WTO 가입의 의미	31
제4절	한국의 일반 경제현황	33
제4장	한 · 중 FTA 추진과 교역전망.....	41
제1절	한 · 중 자유무역협정 추진의 필요성	41
제2절	한 · 중 자유무역협정 추진 과정	44
제3절	한 · 중 자유무역협정 추진 내용	44
1.	중국의 자유무역 협정 추진 내용	44
2.	한국의 자유무역 추진 내용	51
제4절	한 · 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FTA	53
제5절	한 ·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문제점	64
1.	경제적 조건의 차이	64
2.	산업발생의 고착화	65
3.	경제체제의 이질성	65
4.	한 · 중 양국간 무역 불균형 심화	66
제5장	한국과 중국 FTA의 주요쟁점과 추진과제.....	68
제1절	한 · 중 FTA의 주요쟁점	68

제2절 한 · 중 FTA의 추진과제	69
제6장 결론	73
참고문헌.....	76
부록	79
ABSTRACT.....	80

표 목차

<표 2-1> 자유무역협정수의 변화	7
<표 2-2>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	9
<표 2-3> 국별-지역별 FTA 체결현황	15
<표 3-1> 중국 GDP 성장률의 분석	19
<표 3-2> 중국의 주요경제지표	20
<표 3-3> 최근 물가 동향	21
<표 3-4> 최근 5년간 주민 생활개선 현황	22
<표 3-5> 중국의 수출입통계	23
<표 3-6> 중국 10대 수출입품목의 변화	24
<표 3-7> 중국의 주요 세계생산1위 제품	26
<표 3-8> 중국의 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	27
<표 3-9> 중국 산업구조의 변화	29
<표 3-10> 한국의 주요경제지표	33
<표 3-11> 한국의 전체 교역동향	34
<표 3-12> 한국의 10대 수출입국의 변화 추이	35
<표 3-13> 한국 1위 수출대상국 추이.....	36

<표 3-14> 용도별 수입동향	37
<표 3-15> 10대 수출입 상품의 변화	38
<표 3-16> 한국의 무역 의존도 추이	39
<표 4-1> 중국의 FTA 추진 현황	45
<표 4-2> ASEAN의 추진 현황	49
<표 4-3> FTA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	50
<표 4-4>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51
<표 4-5> 품목별 대중국 수출입 추이	53
<표 4-6> 한국의 산업별 대중국 무역수지	55
<표 4-7> 중국의 관세율 조정추이	57
<표 4-8> 유형별 주요 비관세장벽 경험 국가	58
<표 4-9> 한국기업이 본 중국의 주요 비관세장벽 유형 ...	59
<표 4-10> 한·중 비관세장벽에 대한 각국 기업의 평가..	6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의 세계경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자체제를 중심으로 통합되어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확대되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25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WTO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72개는 체결되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WTO와 지역주의는 세계통상질서의 양대 축으로 이미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통상질서는 향후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8년 한국이 칠레와의 FTA 추진을 선언한 후 일본도 FTA 추진을 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2000년말 중국은 아세안과 FTA 추진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함으로써 동북아 한중일 3국은 지역주의에의 참여를 구체화 하게 되었다. 한국, 일본, 중국 3국은 다양한 형태의 FTA 체결을 검토중에 있으며 2002년 11월 한중일 3국의 정상들이 3국간 FTA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중일 3국 FTA 도 논의 되고 있다. 지역패권 경쟁, 영토분쟁, 과거 역사적인 문제,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경제소득 격차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동북아 3국간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는 어려웠으나, 냉전의 종식으로 정치 및 군사적 대립관계가 약화되었고 금융위기 이후 한중일 3국은 일근 국가와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중일 FTA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국시장에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다. 향후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속성장으로 한국과 일본은 대중국 수출의 혜택을 입을 것이다.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응하고 도아시아의 경제를 북미, 유럽과 더불어 세계3대 경제 중심의 하나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3국간 FTA 체결이 필수적이다. 1)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3국간 FTA 와 체결하고 이를 동남아 AFTA 와 연계시키는 것이 동아시아 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은 현재 양자간 FTA 추진을 구체적으로 검토중에 있다. 한일 FTA는 다른 FTA 보다 많은 정치적, 역사적 걸림돌이 있으나 양국은 다양한 이유로 양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배제한 한일 FTA의 체결이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하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한중일 FTA가 중장기적으로는 체결될 것이지만, 한중일 3국에게 한일 FTA 추진연구를 하듯이 단계적으로 한일, 한중, 중일 등 양자간의 FTA에 대한 검토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현재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확대, 지리적 인접성으로 FTA 추진이 더 활발히 연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의 특성, 소득격차, 농업문제, 각종 규제 등의 원인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제거하고 한중 FTA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거시적인 측면에서 양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WTO 등의 저서, 보고서와 각종 세미나, 선행논문 등에서 기초자료 입수 하였으며, 그 밖에 연구 자료는 통계청,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에서 입수 활용하였다.

1) 정인교, “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한·중·일의 입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자유무역협정정책자료센터 한--중-일 FTA 연구자료, 내외경제정책연구원, 203, p6

제3절 논문의 구성

제1장에서는 본 논문의 서론부분으로써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목적 등을 들고 있다. 제2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실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화의 추세와 자유무역 협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경제현황을 언급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 FTA 추진과 교역전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5장은 한국과 중국 FTA의 주요쟁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6장은 본 논문의 결론부분으로써 이런 경제적 효과를 바탕으로 하여 차후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 자유무역협정의 실태

21세기 세계경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그 보편화로 인해 세계통합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세계화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과 연계성이 강화되며 따라서 개방화와 자유화가 점차 심화될 것이다.

요즘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세계경제통합에서 보다시피 관세철폐 또는 단계적인 완화를 통하여 교역이 활성화되고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있으며 고용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세계경제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화와 지역화가 공존하는 단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세계화의 추세와 지역무역협정의 종류, 각 지역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추세와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1절 세계화의 추세

세계화를 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이다.

우선 긍정적 시각에서는 세계화가 세계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현상이며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계화는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규제개혁의 범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가속화되는 경제현상으로서 경쟁과 자유무역을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라고 하는 시장경제의 비전을 달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다른 시각으로, 세계화는 일부 국가·기업에게만 긍정적이라는 회의적인 견해

도 많이 있다. 즉 일각에서는 세계화가 계층간 및 국가간 불평등을 확대시키며 고용, 생화수준, 사회적 발전을 위협한다고 믿고 세계화에 적대적인 입장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회의적 견해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미국테러사태 이후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는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세계화는 무역 및 자본 이동에 따라 세계적 경제통합이 심화되는 현상이다. 때로는 노동 및 기술이동을 일컫기도 하며 경제적 세계화 이외에도 정치, 환경, 문화 차원의 세계화가 논의 될 것이다.

세계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요인²⁾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 및 기술발전의 시기원이 펼쳐지면서 상품의 생산방식과 소비자의 선호가 급변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통신 및 교통수단의 발전은 세계 각 국가의 지리적 거리감을 크게 좁히고 있다.

둘째, 국제무역을 통한 세계 각국의 상호의존도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국내후생을 증진시키는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대외경제관계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OECD국가의 경우 국제무역이 GDP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에 13%에 머물렀으나 1990년대에는 20%를 상회하였다.

셋째, 정치·군사적인 냉전이 종료되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제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미·소 냉전체제하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국방비 지출이 불가피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정치·군사적인 기장이 사라지면서 모든 나라들이 경제문제에 전념하게 된 것이다. 세계 각 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인식하에 시장경제체제의 원활한 운영을 모색하고 있다.

넷째, 환경오염, 에너지수급 불균형, 개도국의 만성적인 외채 및 빈공위기 등은 어느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 모두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2) 최낙균, 위의 보고서, p10

문제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로는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제품의 수요측면에서 소비자들이 상품정보를 빠르고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계소비시장의 동질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계화는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무역체제가 지향하는 생산 및 소비활동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또한 최근의 국제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는 국제 분업을 보다 효율적인 구조로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기업들이 최적의 기술-입지 조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생산 활동을 세계적으로 분산하면서 그동안 제품단위로 특화되어 왔던 국제 분업구조가 공정단위로 더욱 세분화되게 되었다.

세계화의 부정적인 효과로서는 우선 생산요소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면 경제정책의 유효성도 크게 떨어질 것이란 점이다. 세계화의 심화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이 증대하고 자본 유출입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어렵게 하며 외부의 불확실성에 경제를 노출시키는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노동, 환경 등에 대한 규제조치의 실효성도 감소될 수밖에 없다.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외채, 빈곤, 환경·에너지 등 3가지 위기요소가 중복적으로 작용하며, 세계화의 긍정적인 효과가 국가간에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고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제2절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

EU와 NAFTA 등 지역블록의 질적 심화와 외연적인 확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도 일본이 싱가포르와 FTA를 추진하였고 한국이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중에 있다.

국가간, 지역간 FTA는 체결과 동시에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나 민감한 분야는

보통 5~1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회원국간 교역증대, 투자증가 등의 이점이 있으나 취약산업의 도태와 실업증가 등의 부담이 있다.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DDA 협상결렬에 대비한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촌 곳곳에서 개별국가들이 자국과 이해관계가 깊은 국가나 지역공동체와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은 1950년대에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1970대에 활발히 체결되던 지역무역협정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6건으로 매우 부진하였다.

그러나 다자체제가 강화된 1990년대 이후에 지역무역협정은 크게 증가하여 2003년에 WTO에 통보된 것만도 250여건에 이르고 있다.

< 표 2-1 > 자유무역협정수의 변화 (WTO 통보 기준)

구분	1960	1990	2001	2003
체결 건수	2	30	156	250

2003년 기준 세계에서 체결된 FTA는 184개이며, 이중에서 80%가 1990년대 이후 체결되었다. 세계 총무역량의 전반 가량이 FTA 최원국간 자유무역으로 거래되고 있다. 특히 3대 'FTA Hub' 국가인 싱가포르는 38개국과 멕시코는 32개국과 칠레는 38개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2004년까지 아세안과의 FTA 추진을 검토중에 있어 동아시아 경제블록화가 주목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하나의 지구촌 경제로의 통합이라는 세계화에 대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지역주의 경향을 축적하고자 소지역 자유무역협정에 적극 참여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자유무역협정의

다자규범인 GATT 제24조 제8항(b)에 따르면 지역무역협정은 ‘체약국간에 체약국産 제품에 대해 관세와 기타 제한적인 무역교정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서 제거되는 둘이상의 관세지역그룹’으로 정의되고 있다.

본 정의는 상품교역에 한정하여 지역무역협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GATT 제5조에는 서비스분야 경제통합에 관한 별도의 교정을 두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이후에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은 상품분야 외에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등을 대상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지역무역협정은 협정에 따라 협상의 범위가 매우 다양한 편이자, 무엇보다도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기대되는 회원국간 시장접근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요소³⁾이다.

2. 자유무역협정의 형태

지역무역협정의 형태는 회원간의 관세만을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관세동맹에다가 회원국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회원국간금융, 재정정책 등에서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 경제적 통합을 달성하는 완전경제통합 수준인 단일시장(Single Market) 등으로 나눌

3) 정인교, “자유무역협정(FTA) 이해하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개발정책포럼 연구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p1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의 대표적인 예로는 각각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들 수 있다. 경제동맹과 경제연합의 예는 유럽지역에서 체결되었던 협정을 들 수 있는데 서유럽국가들이 1960년대 결성하여 1990년대 초반까지 존속했던 구주공동체(EC)와 1993년에 출범한 유럽연합(EU)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을 분석하여 보면, 자유무역협정(FTA)이 관세동맹에 비해 더 활발하게 체결되었다. 자유무역협정이 활성화된 이유는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체약국 각자가 무역정책과 역외국에 대한 관세설정에 있어 재량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관세동맹은 경제발전단계가 비교적 유사한 국가끼리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거나 경제발전단계가 상이한 국가들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자유무역협정이 선호된다.

< 표2-2 >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

역내 관세 철폐	역외 고등 관세부과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역내 공동경제 정책 수행	초국가적 기구 설치·운영
자유무역협정 (NAFTA,EFTA등)				
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공동시장(EEC, CACM, CCM, ANCOM 등)				
경제공동체 (EC)				

자료: 최낙규, “대외통상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한국 중장기 FTA 추진전략” 세미나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경련 공동주최) 자료집, 한국 무역협회, 2001. p25.에서 재인용

3.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추세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추세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큰 편인데 현재 발효 중인 협정의 50%아상은 서유럽과 지중해연안 지역에서 체결되었고 다음으로는 미주지역과 동유럽이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아태지역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부진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이 지역 국가들도 점차 이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까지 무역상의 특혜를 주고받기 위해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이었다. 하지만 2002년초에 일본이 싱가포르, 한국이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마지막 단계를 검토하면서 오직 중국만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도 2000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ASEAN+3 정상회의 기간중 ASEAN국가들과 FTA 추진 의사를 밝힌 이후 양 지역의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2001년까지 GATT/ WTO에 통보된 220개 협정중 유효한 협정이 172개에 달하고 있는바 특히1995년 WTO 출범이후 통보된 지역협정은 90개에 달하고 있어 최근 지역협장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⁴⁾

EU는 전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확대되는 지역무역협정의 주체라 할 수 있다. 1992년 2월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출범한 유럽연합 (EU)은 중·동구권뿐만 아니라 지중해 남미지역으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유럽연합은 2005년까지 유럽지역과 남미지역의 통합으로 대륙간 확대를 꾀하고 2010년까지 지중해연안 12개국과의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EU와 북미지역의 연계(TAFTA)도 거론되고 있다.⁵⁾

북미지역에서는 미국이 200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교섭을 착수한데 이어 중남미 중시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부시정부 출범이후 범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형성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2000년에 창설된 남부 아프리카개발공동체 (DADC)를 기초로 경제통합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동지역에서도 1989년 발족한 아랍마그레브연맹이 공동시장으로의 발전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지역별, 주요 국가별 FTA 체결 현황

가. 유럽지역

이미 1950년대부터 유럽경제 통합이 시작되어 15개국을 회원국으로 한 EU가 단일 시장으로 통합된 이후 동구권, 남유럽 등으로 경제권을 확대하고 있다.

2003년 4월의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EU 정상회담에서 제5차 EU 확대를 위한 중동구 및 남유럽 10개국⁶⁾ (몰타, 슬로베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4) 정인교, “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한·중·일의 입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자유무역협정정책자료센터 한·중·일 FTA 연구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p15

5) 정인교, “자유무역협정(FTA) 이해하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개발정책포럼 연구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p6

6) 10개국이 신규로 가입하게 된 EU는 인구 4억 5천만 명, G에프 8조 2476억 달러 규모로 미국에 필적할 수 있는 거대경제권이 될 것으로 보임. 경제블록의 규모면에서 EU는 NAFTA 다음으로 세계 제2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키프러스)이 가입조약에 서명함으로써 국가 별로 가입조건에 대한 국민투표, 조약비준 등을 거쳐 2004년 5월부터 EU내 활동이 현실화 되었다.

한편 EU는 최근 2005년을 목표로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연합한 범대서양자 유무역협정 (TAFTA)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0년까지 지중해연안 국들과의 FTA를 설립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EU는 1970년대에 이미 중동의 요르단과 FTA를 체결하였고 APR시코와 2000년에 FTA를 체결한데 이어 남아공, 칠레 등원거리 국가와의 FTA도 매듭짓고 있다.

EU 중에서 스위스, 노르웨이에 EU와 별도로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을 협의중에 있다.

나. 북미지역

북미는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을 체결한 이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 나라들과 FTA 추진에 적극적이다. 2005년을 목표로 북미와 중남미 34개국에 포함된 전미자유무역지대 (FTAA)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NAFTA 이외에도 이스라엘과 1985년, 요르단과 2000년에 FTA를 체결 하였다.

또한 최근 미국 경제회복이 불투명해지자 잠재력이 큰 아시아시장을 새로운 수요창출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동남아 지역 진출의 교두보인 싱가포르와 FTA 체결 하였으며 그밖에 아세안 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이 등과도 FTA 체결가능서 응= 타진하고 있다.

미국은 2003년 6월 6일 싱가포르와 함께 칠레와 FTA를 체결한 예정이었으나 칠레가 이라크 전을 반대하자 FTA 체결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미국은 2003년 6월23일에는 중동 20개국과 미-중동 자유무역지대 (MEFTA)을 구

의 경제권이 될 것이며 교역규모면에서는 약 4조 8215억 달러로 세계전체의 38.1%로 세계 제1위의 경제권이며, 또한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응해 국제결제통화로서 위상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단계적 이행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을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권으로 편입시키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미국, 멕시코와 NAFTA를 체결하여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있는 캐나다는 2003년 5월 27일에는 남미경제공동체인 MERCOUR와 FTA 체결을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미국과 함께 전미자유무역지대 (FTAA) 구축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FTA 3대 허브국가중 하나인 멕시코는 33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과도 FTA 체결을 협상 중에 있다.

다. 중남미지역

중남미지역에는 이미 남미공동시장(MERCOSUR)⁸⁾과 안데스공동체(ANCOM)⁹⁾가 경제권의 중심에 있다.

2003년 6월 28일에는 안데스공동체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2003년 말까지 MERCOSUR과 ANCOM을 통합해 중남미 자유무역지대 설립하기로 합의 하였다.

MERCOSUR과 ANCOM을 통합해 중남미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할 경우 GDP 기준으로 1조 5천억 달러 이상의 거대한 FTA가 탄생할 전망이다.

남미국가 중에서는 단연 칠레가 FTA에 적극적이며 세계의 3대 FTA허브국가중 하나이다. 칠레는 EU,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멕시코 등 38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싱가포르와 FTA를 발효 예정이거나 추진 중이다.

2003년 6월 6일에는 미국과 11년간 협상을 마무리 하고 FTA을 체결하기로 한 남미국가중 유일한 국가였으나 이라크전쟁 반대로 FTA 체결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7) 미국은 이미 이스라엘, 요르단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모르코와 FTA 협상중이다.

8) 남미공동시장(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볼리비아. 1995년 출범하여 대외공동과세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함

9) 안데스공동체(ANCOM): 회원국간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를 회원국으로 1969년 창설

라. 아시아지역

아시아지역에는 1992년에 말레이시아, 차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6개국으로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결성한 이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를 회원국에 추가 영입하였으며, 호주와 뉴질랜드간의 인접국무역협정(CER)과 연계하여 대양주까지 범위를 확장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2002년에 중국과 FTA 창설을 위한 기본골격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 국가들과 연합을 시도하고 있다.

AFTA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아시아지역의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 일본, 한국은 그 동안 독자적인 행보를 취했으나 최근 들어 개별국가들과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3국 또는 2국간 FTA 추진을 위한 연구, 협상 등 다 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말 WTO에 가입한 이후 2002년 11월에 아세안국가들과 FTA창설을 위한 기본 골격에 합의하였으며, 2010년까지 주요 아세안국가들과 교역자유화를 마무리하고 2015년까지 협상을 완료하기로 합의 합의하였다. 2003년 6월 18일에는 타이와 FTA를 체결하여 ASEAN과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실질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한·중·일 3국간 FTA 체결을 위한 공동 연구를 제안하였다. 중국은 외형상으로는 “한국 및 일본과의 조속한 체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동남아국가연합(ASEAN)을 경제적 우군으로 만든 후, 일본과 FTA를 추진할 의사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일본과 FTA를 체결하면 기술력에서 앞선 한국,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폭이 지금보다 훨씬 커져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2001년 싱가포르와 이후 APR시코, 필리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태국, 칠레, 한국, 미국, 호주, ASEAN 등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ASEAN과는 고이즈미 총리의 아세안국가 방문을 계기로 경제협력 강화를 제창하고, 11월의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대상 분야, 타임 스케줄 등 기본원칙을 합의 하였다.

태국과는 2001년 태국총리 방일 중 경제협력을 제안하고, 2002년 7월 태국 경제 파트너십 협의에서 정부간 작업팀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와는 2002년 5월 총리의 오스트레일리아 방문시 정상회담에서 고위급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한 이후 회의를 진행중에 있다.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 하였으며 일본, 타이,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과도 FTA 협상 추진 중이다.

그 밖에 세계의 3대 FTA 허브국가중 하나인 싱가포르는 1990년대 후반부터 FTA 적극 추진하여, 현재 ASEAN(1992.1), 뉴질랜드(2000.11), 일본(2002.1), EFTA(2002.5.6)에 FTA를 체결하였다. (2004.1월 발효). 또한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인도 등과도 FTA 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 < 표2-2 > 참조3

< 표2-3 > 국별-지역별 FTA 체결현황

국가	체결 대상 국가
한국	[발 효 중] 칠레 [협상완료] 싱가포르 [협 상 중] 일본
미국	[발 효 중]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요르단, 싱가포르, 칠레 등 6개국 [협상완료] 중남미5개국 모로코 호주 도미니카공화국 [협 상 중] FREE(新) 중남미5개국, 모로코, 호주, 남아프리카5개국, 도미니카공화국, 바레인
EU	[가 입 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15개국

	[발 효 증] 알제리, 안도라, 요르단,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이집트, 에스토니아, 파로, 아일랜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레바논, 리투아니아, 말타, 멕시코, 모로코, 노르웨이, 팔레스타인, 폴란드, 슬로박공화국,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남아공,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시리아, 튀니지, 터키, 칠레 등 32개국
ASEAN	[발 효 증]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 [협 상 증] 중국, 인도
MERCOSUR	[가 입 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발 효 증] 칠레 [협 상 증] Eu Andean Community 멕시코, 인도 등
중국	[발 효 증] 홍콩, 마카오 [협 상 증] ASEAN
일본	[발 효 증] 싱가포르 [협상완료] 멕시코, 필리핀 [협 상 증]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발 효 증] NAFTA EU EFTA(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이שראל, 칠레 G3(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과테말라, 올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31개국 [협상완료] 우루과이, 일본 [협 상 증] 싱가포르, FREE(新) 아르헨티나, MERCOSUR
칠레	[발 효 증] 캐나다, 멕시코, MERCOSUR(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EU, 미국, 한국 등 30개국
뉴질랜드	[발 효 증] 호주, 싱가포르

	[협 상 중] 홍콩 P3(싱가포르 칠레)
싱가포르	[발 효 중] 일본, ASEAN, 뉴질랜드, EFTA, 호주, 미국 등 17개국 [협 상 중] 캐나다, 인도, 요르단, 한국, 멕시코 P3(뉴질랜드, 칠레)
태국	[발 효 중] ASEAN [협상완료] 호주 [협 상 중] 인도, 페루, BIMST-EC(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5.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의 경제적 효과

지역무역협정은 무역확대 뿐만 아니라 국제투자자와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려는 동기에서 촉발되고 있다. 무역자유화를 통해 국경장벽이 제거되고 연식 통합의 형태가 이루어지지만 지역생산시스템의 발전과 서비스 투자의 촉진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경식 통합, 즉 국내제도 및 표준의 차이를 제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함으로써 협정 참여국들이 세계시장에서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지역주의에 대한 기대효과는 무역창출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서 분석되고 있다. 무역창출은 관세철폐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한 국내생산을 저비용생산국인 회원국의 수입이 대체할 때 발생하므로 전세계 후생을 증진한다. 무역전환은 저비용생산국인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높은 비용의 회원국으로 대체할 때 발생하므로 제세계 후생을 감소한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잘 분석하여 지역주의에 합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각 나라들은 자국에 맞는 자유무역협정 체결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장 중국과 한국의 경제현황

제1절 중국의 일반 경제현황

중국은 1980년 개혁개방이후 연평균9.6%에 달하는 고속성장을 이루었으며 특히 9.5계획기간 (1996년~2000년)중에는 연평균 8.3%의 성장을 이루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위기 영향과 미국과 일본의 경기침체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다 해도 7%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 외환위기 당시 중국은 대국으로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과시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한몫을 하였다. WNEO국은 개혁개방 20년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1세기를 맞이하여 정치, 군사면에서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질서 재편에서 강력한 걸림돌이 됨으로써 미국의 패권주의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2005년 중국의 국내총생산액(GDP)은 102397.9억 위안으로 8.0% 성장하여 세계에서 5위를 차지하였다. 이중 1차 산업은 14884.3억 위안(2.9%), 2차 산업은 52981.9억 위안(9.9%), 3차 산업은 34532.8억 위안(7.3%) 성장하였다. 2006년 1~3

분기는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출도 22.3% 증가하여 전년보다 크게 높아졌다. 세계경제가 침체되는데 반해 중국은 WTO 가입, 올림픽 개최 등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2001년말 WTO가입과 2008년 올림픽 개최는 세계경제 무역 확대발전과 국제무역 질서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베이징올림픽 유치는 국제적 스포츠 행사의 차원을 넘어서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급증 문제, 그동안 발전과정에서 야기된 소득격차 문제 등의 해결에 일정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미국 주도의 일국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축으로서의 그 국제적 위상도 강화될 것이다. 이제부터 중국은 단순한 시장제공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국제경제무역 질서와 규범 수립에 주도적 일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 표 3-1 > 중국 GDP 성장률의 분석¹⁰⁾

연도	GDP 성장률	성장률분석		
		소비	투자	순수출
2001	8.84	5.19	3.27	0.37
2002	9.74	5.31	3.90	0.53
2003	10.25	7.06	2.54	0.65
2004	8.56	5.68	3.08	-0.95

10) 林毅夫, 李永军, "出口与中国的经济增长: 需求导向的分析", 北京大学中国经济研究中心, 2006

2005	809	6.19	4.07	-0.74
2006	8.8	4.74	4.69	-.046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7%~8%성장을 유지하였으며 1%대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하였다. 물가는 도시주민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도시지역의 소비재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0.7% 상승하였으나 공업제품의 공장도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수급측면에서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04년 수출입총액은 6308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전년보다 25% 증가하여 314억 달러 흑자를 달성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WTO 가입에 따른 기대감으로 2004년에는 실행기준 469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외환보유고는 2122억 달러로 무역투자지속 및 외국인 투자유입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28.1% 증가하였다.

< 표 3-2 > 중국의 주요경제지표¹¹⁾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GDP (억원)	57,733	67,795	74,772	79,553	82,054	89,000	95,800	102,000	116,694	136,515
실질GDP 증가율 (%)	10.2	9.7	8.8	7.8	7.1	8.0	7.3	8.0	9.1	9.5
물가상	1408	6.1	0.8	-2.6	-3.0	0.4	0.7	-0.8	1.2	3.9

11) 중국국가통계국 [http:// www.stats.gov.cn](http://www.stats.gov.cn)

승율(%)										
총무역액(억불)	2,809	2,899	3,251	3,240	3,607	4743	5,908	6,208	8,512	11,547
수출입	1,488	1,510	1,827	1,833	1,949	2492	2,662	3,256	4,384	5,934
무역수지	1,321	1,388	1,424	1,402	1,658	2251	2,436	2,952	4,128	5,614
	167	122	403	436	291	241	226	304	255	320
외국인투자(억불)	377	424	452	456	404	407	469	527	535	606
총외채(억불)	1,066	1,160	1,309	1,460	1,518	1,457	1,704	1,685	1,936	-
환율	8.31	8.32	8.28	8.27	8.28	8.2774	8.2766	8.2773	8.2767	8.2765
외환보유고(억불)	736	1,050	1,399	1,450	1,547	1,656	2,122	2,864	4,033	6,099

2004년에는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년에 비해 27% 감소한 5천3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500억 달러)이 사상 최초로 미국(440억 달러)을 제치고 FDI 최대 유치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에서는 전망하였다.

2004년 소비자 매출은 4조 위안을 초과하여 전년대비 8.8% 증가하였고 소비자 물가는 0.8% 하락하였으며 물가하락 요인을 감안하면 소비자 매출은 전년대비 10.2% 상승하였다.

< 표 3-3 > 최근 물가 동향 (연말기준 동년대비)¹²⁾

12) 중국국가통계국 [http:// www.stats.gov.cn](http://www.stats.gov.cn)

	2002	2003	2004	2005	2006
소비자매출 (억 위안)	29.153 (6.8)	31.135 (6.8)	34.153 (9.7)	37.595 (10.0)	40.911 (8.8)
물가지수(%)	-0.8	-1.4	0.4	0.7	-0.8

주민생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전국주민평균 가처분소득은 7703위안 이
고 실제로 4.8% 증가하였다.

< 표 3-4 > 최근 5년간 주민 생활개선 현황 13)

(단위: 위안)

가처분소득(%)	2002	2003	2004	2005	2006
도시주민	7703	8649	9154	1028	1136
농촌주민	2476	2553	2607	2698	2689

전반적으로 중국이 수출입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지만 1999년에는 그
증가폭이 2001년보다 많이 감소하였다. 무역수지도 2001년이 7.6%증가에서 2003년
에는 전년대비 32.8% 감소하고 2005년에는 10.8%, 2003년에는 2.8% 감소하였으나

13) 중국국가통계국 [http:// www.stats.gov.cn](http://www.stats.gov.cn)

여전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43.2% 증가하였다.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경제의 심각한 타격으로 수출이 둔화되어 2007년에는 전년대비 627.6% 증가하였고, 수입은 개혁개방 활성화와 내수시장 확대 등 원인으로 18.2% 증가하였다.

< 표 3-5 > 중국의 수출입통계¹⁴⁾

(단위: 억 달러, %)

년도	총액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99	3606(11.3)	1949(6.1)	1657(8.2)	292(-32.8)
2001	5097(7.5)	2661(6.8)	2436(8.2)	225(-2.8)
2003	6208(21.7)	3256(22.3)	2952(21.2)	304(35.1)
2005	8512(37.1)	4384(34.6)	4128(39.9)	386(46.3)
2007년 상반기	9809(23.3)	5467(27.6)	4342(18.2)	269(83.1)

개혁개방이후 무역의 빠른 증가와 함께 무역의존도도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중국의 높은 무역의존도는 대외개방의 정도를 나타냄과 동시에 경제구조의 후진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소규모경제인 홍콩, 싱가포르는 무역의존도가 높지만 대규모경

14) 중국국가통계국 [http:// www.stats.gov.cn](http://www.stats.gov.cn)

제인 미국, 일본은 무역의존도가 낮다. 중국은 대국이면서도 무역의존도가 높고 수출의 부가가치는 낮다. 그것은 중국의 기술개발 능력이 취약하여 원료, 기술 장비 등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면, 수출은 해외시장 수요와 국제경쟁력이 낮아 가공에 중국국가통계국 의한 상품비중이 크기 때문이다.¹⁵⁾

수출입품목을 보면 개혁개방 이후 1차 산업 부문의 발전이 촉진되어 1차 산업 제품의 수출국이 되었다. 그러나 과거 공업위주 정책의 결과는 1차 산업의 수출을 완만하게 증가시켰다. 반면에 공산품 수출이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여 2006년에 공산품의 총 수출비중이 90%에 달하는 수출구조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수출상품 구조와 마찬가지로 수입상품 구조도 1차 산품에 비해 공산품 비중이 매우 크다. 이것은 1980년대 이후 중국의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외국산 공업원료와 기계설비에 대한 수요증가로 총수입액중 공산품 비율이 급속히 커졌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 중국의 무역상품 구조에 괄목할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수출입상품에 IT 관련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중국의 IT 관련 품목의 수출입은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질 것이다. 중국은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의 수출국으로 부터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첨단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국가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표 3-6> 중국 10대 수출입품목의 변화 16)

	1981	1986	1991	1996	2001	2006

15) 오용석, “중국경제의 구조개혁 평가와 중장기 발전전망”, 한국비교경제학회 2002년도 정기 학술발표대회, 하북-비교경제학회, 2002, p15

16) 오용석, “중국경제의 구조개혁 평가와 중장기 발전전망”, 한국비교경제학회 2006년도 정기 학술발표대회 한국비교경제학회.

수	1	원유	원유	의복	의복	의복	자동처리기계
	2	석유제품	의복	원유	면포	처리기/부품	통신설비
	3	의복	곡물	면포	원유	면사직물	풍천다스플레이
	4	면포	면포	면편직물	수산물	신발류	텔레비전 수상기
	5	곡물	석유제품	수산물	채소	완구	IC 제품
출	6	땅콩류	면화	석유제품	석탄	플라스틱제품	인쇄기계
	7	수산물	수산물	완구	선풍기	휴대전화	전자기기
	8	석탄	테릴렌포	테릴렌포	가정용자기	가구	의류
	9	통조림	통조림	통조림	면사	여행용품	전자부품
	10	레이스	면사	석탄	자전거	면직물	모방직품
수 업	1	설비/부품	강재	화학비료	강재	집적회로소자	IC제품
	2	식량	자동차/샤시	강재	화학비료	원유	화학제품
	3	강재	식량	식량	석유	처리기/부품	전자기기
	4	원면	합성섬유	합성섬유	식량	강재	철광석
	5	합성섬유	화학비료	자동차/샤시	공적기계	폴리스티렌	통신설비
	6	화학비료	원목	종이/판지	종이/판지	계측분석기	자동처리기계
	7	식용당류	종이/판지	식물기름	항공기	합성섬유	평판디스플레이
	8	펄프	양털	양철	식물기름	회로보호장치	석유제품

9	종이/판지	폴리에틸렌	자동차부품	합성섬유	석유제품	반도체
10	TV수상기	공작기계	폴리에틸렌	철광석	항공기	금속제품

중국 수출구조의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경공업제품 중심에서 전자 등 기술이 필요한 제품 중심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1999년 기준으로 이미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최大家전제품 생산국으로 부상했는데 TV(세계점유율 36%), 에어컨 (50%), 세탁기(24%) 등에서 세계 1위이다. 생산품목도 구형에서 최신형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40 인치급의 최신형 대화면평면 TV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복사기, 오토바이 등 가정용 전기제품 생산량이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표 3-7 > 중국의 주요 세계생산1위 제품¹⁷⁾

(단위: 만대, %)

제품군	제품	생산량	점유율
가전제품	세탁기	1,443만대	24%
	냉장고	1,729만대	16%
	에어컨	1,279만대	30%
	선풍기	1,827만대	50% 이상
	텔레비전	5,514만대	50% 이상

17) 북경 무역관 유선화 pekktok@kotra.or.kr

통신장비	전화기	9,598만대	약 50%
	단말기	4,590만대	70%
의약업	페니실린	-	60%
	테라마이신	-	65%
	비타민 C	-	50%
기계장비	트랙터, 컨테이너	-	83%

중국의 무역이 증가하면서 중국은 세계 주요국가와 활발히 교역을 진행하고 있다. 2002년, 중국은 주요 교역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제1의 시장은 미국이며 2002년 대미 수출액은 699억 달러, 대미 수입액은 272억 달러로 42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제2의 수출시장이지만 동시에 최대의 수입구이기도 하다. 중국통계기준으로는 중국은 일본에 무역수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무역에서 수입이 수출을 훨씬 초과하여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상당한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이 상당량이 중간재, 소비재, IT제품 등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특성은 한국기업의 대중국 제조업투자에 의해 유발된 것이다.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의 교역 다변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주요 교역국인 미국, 일본, 한국 등의 경기가 침체상태이지만 이들 국가로의 수출증가율이 각각 22.1%, 7.6%, 23.6%로 2001년보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지역에 대한 교역도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표 3-8 >중국의 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¹⁸⁾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국명	2002	2003	2004	2005	2006
국가별 수출	합계	325,642	438,472	593,647	762,326	969,323
	미국	69,959	92,510	124,973	162,938	203,516
	홍콩	58,483	76,323	101,126	124,504	155,434
	일본	48,483	59,453	73,536	84,097	91,771
	한국	15,507	20,104	27,809	35,116	44,557
	독일	11,381	17,446	23,754	32,537	40,302
	네델란드	9,070	13,500	18,517	25,876	30,843
	영국	8,058	10,827	14,975	18,983	24,158
	싱가폴	6,589	9,013	12,695	16,716	23,188
	대만	6,968	8,873	13,547	16,558	15,829
국가별 수입	합계	243,567	413,095	560,811	660,221	791,793
	일본	42,810	74,204	94,191	76,873	89,818
	대만	27,344	49,364	64,759	74,655	87,140
	한국	23,395	43,160	62,165	55,178	73,365
	미국	26,203	33,882	44,652	48,734	59,222
	중국	13,694	25,111	38,795	30,668	37,887
	독일	8,768	24,391	30,158	20,107	23,576
	말레이시아	9,423	13,998	18,162	16,146	19,195
	싱가폴	6,205	10,486	14,001	13,993	17,961

제2절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중국경제구조에는 개혁이전의 영향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一·五 계획의 기준연도인 1952년에 중국은 전형적인 농업국가였다. 농촌인구가 전체인구의 87.5%를 차

18) 한국무역협회 <http://kotis.kita.net>

지하고 농업위주의 제1차 산업 취업자도 83.5%였으며 국내생산액도 1차 산업이 50.5%를 차지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산업과 취업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一·五 계획부터 중공업 위주의 공업화에 치중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산업생산구조는 2차 산업이 비중이 과도하게 커지고 취업구조에서는 여전히 1차 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상태를 유지하는 등 전체적인 산업구조가 크게 왜곡되었다. 1960년대 이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산업고도화에 따라 국내총생산에서 서비스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추세를 나타냈으나 중국은 그 비중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1960년대 중반부터 80년까지는 공업화에 밀려 감소하기도 하였다. 개혁개방이 진전되면서 중국의 서비스 생산의 비중도 증가추세를 이루었고 1990년대 부터 30%를 넘었지만 2001년 까지 여전히 개도국의 평균수준 보다 낮다.

중국은 경제구조의 개혁을 통해 산업의 경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다. 면화, 면사, 면직물, 의류, 합성섬유, 화학섬유, 화학비료, 조강, 백색가전제품, 시멘트, 유리, 등의 생산량은 세계 1위를 차지한다. 합성수지, 에너지 생산량은 미국 다음으로 2위이다. 그리고 컴퓨터, 통신기기, 가전, 반도체 등 정보기술(IT)산업에서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3위 생산국이다. 조선 수주량도 일본과 한국 다음으로 세계3위이다. 그밖에 타이어, 합성고무 등의 생산량 역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 표3-9 >중국 산업구조의 변화 (%)

연도	국내생산구조				취업구조		
	제1차산업	제2차산업	공업	제3차산업	제1차산업	제2차산업	제3차산업
1952	50.5	20.9	17.6	28.6	85.3	7.4	9.1
1958	34.1	37.0	31.7	28.9	58.2	26.4	15.4

1962	39.4	31.3	28.3	29.3	82.0	7.8	10.1
1965	37.9	35.1	31.8	27.0	81.5	8.3	10.2
1970	35.2	40.5	36.8	24.3	80.7	10.1	9.2
1978	28.1	48.2	44.3	23.7	70.5	17.3	12.2
1980	30.1	48.5	44.2	21.4	68.7	18.2	13.1
1985	28.4	43.1	38.5	28.5	62.4	20.8	16.8
1990	27.1	41.6	37.0	31.3	60.1	21.4	18.5
1995	20.5	48.8	42.3	30.7	52.2	23.0	24.8
2000	15.9	50.9	44.3	33.2	50.0	22.5	27.5
2004	15.2	51.1	44.4	33.6	50.0	22.3	27.7

개혁개방이후 중국에서 비교우위가 가장 큰 산업으로 부상한 것은 섬유산업이다. 중국의 섬유산업은 1979~2000년 연평균 약 13% 성장하였고 중국 수출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전자산업 등 다른 산업들이 매우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섬유산업 생산비중은 감소추세이다. 1980년 섬유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7%였으나 2000년에는 9.6%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구조상에서 노동집약적산업인 섬유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조선산업도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대규모시설확장과 설비 증설에 주력하고 있다. 전자산업은 이미 백색가전 분야에서 세계시장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급과잉 문제에 봉착해 있다. 중국IT산업은 2001년말 세계 1위 이동통신사업자와 세계2위의 유선통신망을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산업의 취약점은 아직도 크다. 중국은 화학섬유, 화학비료 등에서는 세계최대 생산국이고 합성수지와 합성고무 생산량도 세계적 순위가 앞서지만 석유화학산업은 아직 성장단계에 있다. 중국 GDP중에서 석유화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다. 중국석유화학산업의 취약점은 기업규모의 영세성이다. 생산능력을 갖춘 대형 기업이 매우 적다. 철강 산업은 개혁개방이후에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1992년에 49.8%의 높은 성장으로 생산

량 100만대를 돌파한 추에 1996년에 성장률이 1.5%까지 둔화되었다가 1997년부터 다시 회복되고 있다. 2001년 GDP 점유율은 4% 정도이다. 중국의 자동차부품 생산 기업은 기술수준이 낙후되고 생산라인이 분산되어 체계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제3절 중국의 WTO 가입의 의미

중국은 15년이란 긴 협상의 종결로서 2002년부터 정식으로 WTO회원국이 되었다. 2001년 9월 9월 중국은 멕시코와의 마지막 쌍무협상을 타결한데 이어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가입작업반 회의에서 마지막 밤은 쟁점이었던 외국보험회사 지사의 봉위 및 관세쿼터 문제를 타결함으로써 모든 협상을 종결하였다.

중국은 지난 15년동안 GATT/WTO 가입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만큼 WTO 가입은 중국의 필수적 과제였으며, 여기에는 몇 가지 의도하는 바가 있었다.

우선 세계 10대 교역국의 하나인 중국은 이미 IMF와 세계은행 등 WTO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요 국제금융기구와 국제무역기구에 가입한 상태이며, 또한 APEC과 ASEM의 회원국으로서 세계경제 및 지역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마지막 남은 WTO 가입을 통해 부역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등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는 한편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해 중국의 정치·경제적 위상을 제고하려 하고 있다.

둘째, 현재 추진중인 개혁·개방정책을 WTO 가입에 연계시킴으로써 차질 없이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셋째, 중국의 대미, 대유럽 무역불균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WTO 가입을 통해 이들 선진국에 의한 직접적인 통상압력을 회피하고 이를 WTO의 분쟁해

결절차로 수렴함으로써 쌍무적 협상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고려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WTO 가입은 경제는 물론 사회, 정치 일반에 광범위하고도 심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우선 개혁개방의 가속화가 진행 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의 지속적 추진은 중국이 지난 20여년간 추진해 온 가장 중요한 정책가제이자 WTO 가입의 주요 목적의 하나이기도 하다.

WTO 가입으로 인해 중국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이 가속화될 것이다. 중국경제가 세계경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중국의 무역관련 규범, 정책 및 관행이 국제기준에 맞게 적응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선 중국이 지금까지 가입협상에서 합의한 가입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구체화 될 것이다. 중국은 가입협상을 통해 관세, 비관세장벽의 완화, 철폐는 물론 투자와 대외무역권 제도의 개혁 및 다양한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합의하였고, 더욱이 대부분의 개혁개방에 대한 합의사항을 WTO 가입후 3~5년 이내에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 중국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대외무역의 양적 확대 및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이 WTO 회원국이 되면 모든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무조건적 최혜국대우를 부여받게 되므로 안정적 수출시장의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수출증대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¹⁹⁾ 반면 수입시장도 개방된다. 중국은 WTO 가입협상에서 현재 17% 수준에 있는 공산품 평균관세율을 2005년까지 90405로 인하하는 한편 현재 19%의 농산물 평균관세율은 2004년까지 17%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정보통신협정(ITA) 가입과 수입허가제폐지 등이 이루어지면 WTO회원국의 중국시장 접근이 용이해져 중국의 수입도 증가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시장이 한층 개방되고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19) 김익주,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경제와 한·중 경협에 미치는 영향”, 정책연구 95-10, 내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p99-103

중국의 무역구조도 점차 변화할 것이다. 향후 수출구조는 보다 시장 경제적 변수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비교우위에 입각한 특화에 따라 저렴한 임금을 이용한 노동집약적인 수출구조가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확대 및 기술수준의 향상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무역구조도 점차 자본 혹은 기술집약적 상품 수출의 구조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증대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이다. 특히 농업구조 개혁은 필수적이다. 시장개방에 따라 지금까지 과세 및 비관세장벽으로 보호되어 왔던 농업과 자본·기술집약적인 산업은 상대적 경쟁력의 약화로 그 생산과 고용이 감소되는 반면,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은 수출의 확대에 힘입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수출이 증대되고 외국인투자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증대됨으로써 중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강화될 것이다.

제4절 한국의 일반 경제현황

1960년대부터 수출지향적인 경제정책으로 한국경제는 급성장하여 1996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나 1997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한국경제는 심한 타격을 입고 2000년에 IMF 체제에서 벗어나면서 경제는 다시 회복추세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또다시 내수경기 침체, 국내 기업 불황 등 원인으로 침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1998년에는 금융위기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를 보였으며 2002년에는 수출의 호조로 인하여 전년대비 10.9%나 성장하였다. 실업률도 2001년의 7.0%에서 2005년에는 3.1%로 하락하였다. 수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한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표3-10 > 한국의 주요경제지표²⁰⁾

지표	2001	2002	2003	2004	2005	
경제성장률(%)	-6.7	10.9	9.3	3.1	6.3	
물가 (%)	생산자	12.2	-2.1	2.0	0.5	-0.3
	소비자	7.5	0.8	2.3	4.1	2.7
실업률(%)	7.0	6.3	4.1	3.8	3.1	
수출 (백만달러,%)	132,313 (-2.8)	143,685 (8.6)	172,268 (19.9)	150,439 (-12.7)	162,471 (8.0)	
수입 (백만달러,%)	93,282 (35.5)	119,752 (28.4)	160,480 (34.0)	141,098 (-12.1)	152,126 (7.8)	
외환보유액 (백만달러)	48,510	74,055	96,198	102,821	121,413	

< 표 3-11 > 한국의 전체 교역동향²¹⁾

(단위: 억 달러, %)

	총액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01년	2,225.9	1,323.1	932.8	390.3
2002년	2,643.4	1,436.9	1,107.5	239.4

20) 통계청 <http://www.nso.go.kr>

21) 한국무역협회 <http://kotis.kita.net>

2003년	3,331.1	1,726.9	1,604.9	121.3
2004년	2,914.5	1,504.4	1,410.1	94.3
2005년	3,146.0	1,624.7	1,521.3	103.4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2001년에는 9.11테러, 미국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흑자폭이 감소하였으며 2002년에도 수출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1965년 수출상대 국가의 수가 59개였으며 2000에는 238개로 증가하였다. 무역비중이 미국, 일본에 집중되었으나 1990년대부터 중국에 대한 수출입비중에 커지면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로 등장하였다. 2003년까지 대 중국 수출은 300억 달러(전년 동기대비 48.29% 증가)로 대미수출(293달러, 2.7% 증가)을 능가하였다. 미국, 일본, EU등 3대 선진국 시장으로의 수출 비중은 감소추세로 2000년 47.3%에서 2003년 39.5%로 축소되면서 중국이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일본,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주를 이루었으나 90년대부터 중국과의 교역이 능가하면서 수입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0년까지 중국으로부터의 제3위에 머물러있지만 현재에는 그 순위가 일본, 미국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 표 3-12 > 한국의 10대 수출입국의 변화 추이²²⁾

22) 한국무역협회 <http://kotis.kita.net>

(단위: 백만 달러)

순 위	1964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국명	금액	국명	금액	국명	금액	국명	금액	국명	금액	
수 출	1	일본	38.2	미국	395	미국	4607	미국	19360	미국	37611
	2	미국	35.6	일본	236	일본	3039	일본	12638	일본	20466
	3	홍콩	11.6	홍콩	28	사우디	946	홍콩	3780	중국	18455
	4	영국	6.5	독일	27	독일	876	독일	2882	홍콩	10708
	5	베트남	6.3	캐나다	20	홍콩	823	싱가폴	1805	대만	8027
	6	네델란드	2.7	네델란드	14	이란	618	영국	1750	싱가폴	5648
	7	태국	2.6	영국	13	영국	573	캐나다	1731	영국	5380
	8	싱가폴	2.1	베트남	13	인니	366	대만	1249	독일	5154
	9	내만	1.9	싱가폴	11	네델란드	350	프랑스	1119	말련	3515
	10	벨기에	1.8	스웨덴	8	캐나다	343	인니	1079	이니	3504
	소계	109.3	소계	763	소계	1254 1	소계	47393	소계	11846 8	
	전체	119	전체	853	전체	1750 5	전체	65016	전체	17226 8	
수 입	1	미국	202.1	일본	813	일본	5858	일본	18754	일본	31828
	2	일본	110.1	미국	585	미국	4890	미국	16942	미국	29242
	3	독일	23.9	독일	67	사우디	3288	독일	3295	중국	12799
	4	필리핀	9.0	말레이	58	네델란드	1853	호주	2589	사우디	9641
	5	홍콩	5.9	프랑스	52	호주	680	중국	2268	호주	5959
	6	대만	5.2	필리핀	42	이란	643	사우디	1725	인니	5287
	7	이태리	4.5	이란	39	독일	637	인니	1600	말련	4878
	8	네델란드	4.0	영국	33	인니	485	말련	1586	UAE	4703
	9	영국	3.2	네델란드	31	말련	472	캐나다	1465	대만	4701
	10	캐나다	2.5	대만	24	캐나다	378	대만	1452	독일	4625
	소계	370.4	소계	1740	소계	1908 4	소계	51496	소계	11366 3	
	전체	404	전체	1984	전체	2229	전체	69844	전체	16048	

							2				1
--	--	--	--	--	--	--	---	--	--	--	---

< 표 3-13 > 한국 1위 수출대상국 추이²³⁾

1946년	47년~49년	50년~52년	53년~56년	57년~64년	65년~02년	03년~06년
중국	홍콩	일본	미국	일본	미국	중국

< 표 3-13 >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한국은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출호조에 따라 원자재와 자본재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되고 있다. 원자재 수입은 2003년 739억 달러에서 2005년 11월까지 777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자본재는 515억 달러에서 2005년 11월까지 583억 달러로 증가 하였다.

< 표 3-14 > 용도별 수입동향²⁴⁾

(억 달러, %)

	2001	2003	2005
원자재	739(9.4)	761(2.9)	777(16.9)
자본재	515(-20.2)	564(9.4)	583(18.4)

23)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4)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소비재	152(804)	188(36.6)	185(12.4)
총수입	1411(-12.1)	1521(7.8)	1557(17.2)

< 표 3-15 > 10대 수출입 상품의 변화

(단위: 백만 달러)

		1961년		1980년		2005년	
1	철광석	5.3(13.0)	의류	2,778(16.0)	반도체	29,986(10.5)	
2	중석	5.1(12.6)	철강판	945(5.4)	자동차	29,506(10.4)	
3	생사	2.7(6.7)	신발	908(5.2)	무선통신기기	27,495(9.7)	
4	무연탄	2.4(5.8)	선박	620(3.6)	선박	17,727(6.2)	
5	오징어	2.3(5.5)	음향기기	593(3.4)	석유제품	15,366(5.4)	
6	활선어	1.9(4.5)	인조장섬유직물	564(3.2)	컴퓨터	14,117(5.0)	
7	흑연	1.7(4.2)	고무제품	503(2.9)	합성수지	10,304(3.6)	
8	합판	1.4(3.3)	목재류	485(2.8)	철강판	10,215(3.6)	
9	미곡	1.4(3.3)	영상기기	446(2.6)	자동차부품	8,453(3.0)	
10	돈모	1.2(3.0)	반도체	434(2.5)	영상기기	7,430(2.6)	
	10대상품	25.3(62.0)	10대상품	8,276(47.6)	10대상품	170,599(60.0)	
	전품목	40.9(100.0)	전품목	17,370(100.0)	전품목	284,419(100.0)	

		1961년		1980년		2005년	
1	일본	19.4(50.3)	미국	4,607(26.3)	중국	61,915(21.8)	
2	홍콩	7.4(19.2)	일본	3,039(17.4)	미국	41,343(14.5)	
3	미국	6.8(17.6)	사우디아라비아	946(5.4)	일본	24,027(8.4)	
4	영국	1.4(3.6)	독일	876(5.0)	홍콩	15,531(5.5)	
5	독일	1.0(2.6)	홍콩	823(4.7)	대만	10,863(3.8)	
6	이태리	0.6(1.6)	이란	618(3.5)	독일	10,304(3.6)	
7	대만	0.5(1.3)	영국	573(3.3)	싱가포르	7,407(2.6)	
8	싱가포르	0.5(1.3)	인도네시아	366(2.1)	영국	5,339(1.9)	

9	태국	0.2(0.5)	네덜란드	350(2.0)	인도네시아	5,046(1.8)
10	호주	0.1(0.3)	캐나다	343(2.0)	말레이시아	4,608(1.6)
계	10대수출 국 계 전체 수출 계	38.0(98.4) 38.6(100.0)	10대수출국 계 전체 수출 계	12,541(71.6) 17,505(100.0)	10대수출국 계 전체 수출 계	186,383(65.5) 284,419(100.0)

한국의 10대 수출품목에 대한 집중도는 1980년대 이후 점차 상승하였다. 1992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반도체가 제1의 수출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자동차와 선박은 90년대 초반 이후 주력품목으로 성장하였으며 컴퓨터 주력 수출품목을 급성장 하였다. 제조업에 의한 수출비중보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품목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주입품목으로는 1980년대로부터 계속하여 원유가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1차상품의 비중 역시 커지고 있다.

< 표 3-16 > 한국의 무역 의존도 추이²⁵⁾

(단위: 억 달러, %)

연도	정상GNP	수출		수입		무역의 존도 (%)
		금액	의존도(%)	금액	의존도(%)	
1965	30	1.8	5.8	4.6	15.4	21.2
1970	81	8.4	10.3	19.8	24.5	34.8
1975	209	50.8	24.3	72.7	34.8	59.1

25) 한국무역협회 <http://kotis.kita.net>
통계청 <http://www.nso.go.kr>

1980	606	175.1	28.9	222.9	36.8	65.7
985	911	302.8	33.2	311.4	34.2	67.4
1990	2523	650.2	25.8	698.4	27.7	53.5
1995	4881	1250.1	25.6	1351.2	27.7	53.2
1998	3121	1323.1	41.6	932.8	29.4	71.0
1999	4007	1436.9	35.4	1197.5	29.5	64.9
2000	4592	1772.7	37.7	1604.8	35.1	72.7
2001	4261	1504.4	28.3	1410.9	30.2	58.5
2002	4770	1524.7	31.2	1521.3	31.3	62.5

한국은 무역에 의해 성장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으면 세계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현재 전세계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한국도 따라서 불황을 겪고 있다. <표 3-16>에서 보듯이 무역 의존도는 1965년이 21.2%에서 2000년에는 72.7%로 증가하였다. 수출 의존도도 마찬가지로 1965년의 5.8%에서 2000년에는 무려 37.7%로 상승하였다.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출에 주력했기 때문에 1998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제4장 한 · 중 FTA 추진과 교역 전망

제1절 한 · 중 자유무역협정 추진의 필요성

20세기 중반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가 고도성장을 거듭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아 왔으며,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도 이 지역 경제는 세계경제이 축으로 그 위용을 더욱 떨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지역에 속해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이 지역 전체에 대한 경제협력 논의가 다자주의 측면에서 볼 때 나름대로 그 의의가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현세계경제가 일면 세계화를 표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역블록화에 따른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다변화시대 하에서 한·중의 양국체제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 동아시아권은 아직까지 별다른 경제적 결속과 획기적인 경제적 협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²⁶⁾

구체적으로 아시아지역에서는 ASEAN을 확대하여 동아시아경제협력협의체(EAEC)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시도되었지만 EAEC는 실제로는 실현되지는 않았고, ASEAN 국가들은 이를 확대하여 작은 아시아자유무역협정(AFTA)만을 가시화 했을 뿐이다.

26) 김성후·박결렬, “한미간 자유무역지대의 (FTA)의 전망과 한국의 전략” 동신대학교 인문논총 제6집, 2001. 12. 30 재인용

이처럼 동북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우선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지역범위의 설정이 세계적 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지역에 위치한 국가간의 경제체제와 경제발전의 차이, 민족과 문화의 이질성 등으로 인해 큰 기대와 구상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경제통합은 다른 지역의 경제협력 속도만큼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민간차원에서의 질적인 경제협력보다도 정부간의 정책적 추진에 의해서 경제협력이 우선 추진됨으로써 역내의 국제교류 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것도 사실이다.²⁷⁾

그러나 동북아경제권이 국가간 경제체제의 상이, 경제발전 수준의 격차, 경제규모의 차이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경제협력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적 범위를 축소하여 지역경제통합을 한국과 중국으로 국한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한·중 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유사점을 함께 공유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존의 다양한 교류의 확대·발전을 통해 한·중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 가운데 한·두 개의 적은 수의 지역협정만 맺은 국가는 다자간 교역체제하에서 실행되는 각종 협상에서 불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개방 압력을 자국의 힘만으로 대처하여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또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국가가 다른 국가와 배타적 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로부터 무역전환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²⁸⁾ 이러한 점은 한, 두개 밖에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국, 중국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은 최근까지도 세계 어느 지역보다 빠

27) 실계를 들어 15개국으로 확대 개편된 EU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통합하여 유럽경제지역(EEA)이라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하였다. 북미에서는 미국이 주동하여 중요 3국간에 NAFTA를 결성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미주 전역의 34개국을 포함하는 미주자유무역협정(EFTA)을 추진하고 있다.

28) 예를 들면,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는데, 북미지역에서 NAFTA가 출현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비교역이 감소할 수 있음.

른 성장세를 보여 왔기 때문에 한·중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운 수출시장의 확보와 중요한 생산기지 확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교역형향을 살펴보면 중국, 대만 등과 교역에서는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EU, 일본 등 선진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를 상쇄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 주요국들과 경제협력기구를 형성할 경우 그에 따른 경우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지대하리라 예상된다.²⁹⁾

국가간 경제적 보완성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개도국으로서의 개발경험과 생산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양국이 최적으로 결합 시 이들 전체 국가들의 잠재경제성장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북아지역이 경제협력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동·서 냉전시대 때 이 지역에 상존했던 정치·군사적 긴장상태와 경제체제의 국가간 차이를 들 수 있으나 구소련의 붕괴와 이에 따른 공산주의 국가의 급속한 퇴락은 그 같은 긴장과 경제체제의 괴리를 크게 완화 시켰다. 특히 최근 중국의 WTO 가입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서방국가들과의 국교수립으로 동북아 지역 내 경제는 증대하고 있으며,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잦은 통상마찰로 인해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하며, 그 해결방안으로써 이지역내의 주요 국가들과 경제협력기구를 창성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동북아 지역에는 다수의 한민족이 거주하고 있어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도 경제통합 논의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지리적, 문화적, 기존 경제 교류 경험 등의 측면에서 중국 동북3성 지역과의 경제협력에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어 그 가능성을 더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도 교역관계가 점차 긴밀해지고 있어 향후 한·중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경제협력체를 창설할 경우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

29) 이지평·강선구, “한·일 자유무역지대창설의 득실과 시사점”, LG경제연구원 2000. 12. p3-4

상되며 북한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밀접하여 유력한 협력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분당 이후 체제 차이로 인해 교류가 소원 했지만 앞으로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 나아가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중 경제협력체 같은 지역 내에 경제협력의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 정치적 긴장완화를 위해서도 양국간의 FTA를 통한 경제협력은 절대적인 것이다. 즉 양국의 경제협력체를 바탕으로 남북문제에 적극적으로 기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날 것이며, 더 나아가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한·중 자유무역협정 추진 과정

중국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 단계라고 보인다.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기본적으로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설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ASEAN 시장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 구축에 모든 정책 방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초보단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중국 농업부 산하 농업경제연구소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한 적은 없으며, 이는 곧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행보가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농업이외 분야는 한국에게 득이 되므로 농업부문이 중국에게 이득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실제 FTA 체결과정에서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제3절 한 · 중 자유무역협정 추진 내용

1. 중국의 자유무역 협정 추진 내용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ASEAN 국가, 한국, 일본, 인도,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 등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 중이며, ASEAN 국가들과는 2000년 이후 공동연구를 거쳐 2002년 FTA 체결 기본협정에 합의하고 2015년까지 정식 FTA 체결을 목표로 하되 가급적 앞당겨 시행한다는 원칙하에 본격적인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및 일본에 대해서는 2002년 ASEAN+3 회담에서 한·중·일 3국이 모두 포함되는 동아시아 자유 무역지역 창설도 중장기 과제로 연구·검토 중에 있다.

인도와도 2003년 9월 23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함과 아울러 FTA 협상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밖에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 등 상해협력기구(Shanghai Corporate Organization:SCO) 가입국가와도 최근 무역 증가와 더불어 경제협력관계가 강화되면서 FTA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4개국(가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러시아 등을 회원국으로 2001년 6월 발족하여 정치, 경제, 무역, 안전보장 등을 주제로 정기적으로 수뇌회담을 개최하였다. 한편 홍콩 및 마카오와는 2003년 6월 29일 및 10월 17일 FTA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체결 하였다. 중국이 최근 주변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정치·외교적인 의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지역 내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금융위기 국가에 대한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지원이 지연되어 금융위기가 주변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역내 양자간 또는 다자간 틀내에서 보다 즉각적인 조치를

치할 수 있는 협력체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또한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역내 교역확대 등 경제협력의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었다.

< 표 4-1 > 중국의 FTA 추진 현황³⁰⁾

대상국	추진 경과	시기
ASEAN	*주옥-ASEAN경제협력을 위한 협상 제안	2000.11
	*10년내 체결을 목표로 FTA 협상 개시	2001.11
	*FTA 체결 목표를 구체화시킨 기본협정 합의	2002.1
	*태국과 188개 농산물 2003년10월부터 조기자유화 합의	2003.6
한국, 일본	*한·중·일 FTA 공동연구를 제의	2002.11
	*이와 동시에 한·중 FTA 공동연구도 제의	2002.11
ASEAN+ 한중일	*FTA를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 중	
홍콩	*경제 동반관계 강화협정 (CEPA) 체결	2003.6
마카오	*경제 동반관계 강화협정 (CEPA) 체결	2003.10
인도	*양국수상회담에서 FTA 체결 협상에 대해 비공식 논의	2002.11
미국, EU	*FTA 체결을 연구 검토 중	

금융위기 직후 당시 주룽지 총리는 정부 관련부처에 아시아국가와의 경제협력 방안의 연구를 지시하였다고 한다. 2001년 11월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 경제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경제 이외에 정치 및 외교 분야에서도 주도권

30) 농협중앙회, <조사월보> 2003. 참조

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작용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ASEAN과의 FTA 교섭에 참가하고 있는 중국측 실무자들은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항하는 한편 아시아 경제에서도 일본의 주도적 역할을 견제하려는 것이 FTA 추진의 중요한 목적중 하나라고 비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경제 이외 정치, 외교적 목적도 적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ASEAN과의 FTA를 서두르는 것은 ①수출시장의 확대, ②아시아에서 경제적 주도권 확보 및 ③중국의 전략적 안전도모 등을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① 지속적인 수출확대 및 대미 수출의존도 축소를 위한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ASEAN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데다 고도성장 지역으로서 중국의 수출시장으로 매우 중요하며, 특히 중국의 상품중 선진국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중저가 제품에 대한 풍부한 수요를 가지고 있고, ASEAN 시장은 무역마찰이 높아지고 있는 대미수출의 의존도를 낮추는 데에도 적합한 수출시장이기 때문이다.

② 중장기적으로 아시아 경제에서의 주도권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ASEAN과의 FTA를 바탕으로 중장기 목표인 「동아시아자유무역지역」 설립 협상시 주도권 확보 가능하며, ASEAN 10개국을 지원세력으로 포용하여 중국과 ASEAN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구체적 기준 결정에 있어 영향력 발휘가 가능하고 ASEAN 국가는 중국과의 교역증가시 양자의 경제력에 비추어 볼 때 중국 의존도가 심화됨으로써 중국의 영향권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 FTA를 주도함으로써 WTO 등과의 새로운 투자·경쟁의 규정, 무역 원활화 조치, 전자상거래 등의 협상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대표’로서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③ 주변국과의 신뢰관계 형성으로 전략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국의 중국 봉쇄를 견제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한 주변국과의 신뢰관계 형성의 필요하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및 중앙아시아 등의 군사기지 신설, 남지나해 주변기지 확대 등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 중국은 ASEAN과의 FTA체결 이외에도 아시아 각국들과 영유권 문제, 테러 협력 등 안전보장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를 포괄하는 「상해협력 기구」를 구성하여 대응하려 하

고 있다.

특히 중동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간의 교통로 확보가 석유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원유를 미얀마에서 운남성까지 직접 수송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메콩강 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ASEAN에 대해 먼저 FTA를 제안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을 추진하고, 특히 정치 및 경제상황의 차이 등에 따른 ASEAN국가들의 중국위협론을 불식하기 위해 중국이 양보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ASEAN이 경쟁력을 가진 농업분야의 자유화를 중국이 먼저 수용한 후 공업제품 자유화로 이행한다는 2단계 자유화원칙을 제시하고 ASEAN 후발국들에 대해서는 무역우대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은 FTAA (미주자유무역권) 교섭에서 미국이 보여주었던 지나친 자국국익 우선주의와 대조되는 접근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5개국의 300억달러에 달하는 대중국 채무를 감면하고 메콩강유역 국가들에 자금 원조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2003년 8월 중국 운남성에서 열린 제5회 「ASEAN 메콩강유역 개발협력회의」에서 중국은 ASEAN 메콩강유역 개발협력의 적극적인 참가자이며 추진주체임을 강조하였다. 31)

경제이외의 면에서도 ASEAN 국가들과 영토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남사군도 문제와 관련하여 무력행사 포기 및 현상유지를 약속하고 분쟁예방을 위한 「남자나해 행동선언」에 조인하는 등 유화적인 입장 표명하고 있다.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각국이 이들 섬을 점유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함으로써 분쟁해소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31) 메콩강은 티벳고원에서 시작하여 중국 운남성을 거쳐 미얀마, 태국, 라오스의 국경을 통해 캄보디아, 베트남을 경유하여 남지나해로 흐르는 전장 약 4,200km의 大河임.

한편 홍콩에서 CEPA 체결도 경제적인 실익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입장에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 각국 및 화교들의 중국에 대한 투자 및 물류창구 역할을 해 왔던 홍콩경제가 최근 침체를 거듭하며 위상이 저하되고 있는 데 대해 ① 국제자금조달 창구로서의 역할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는 한편 ② 장기적으로 중화경제권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홍콩정부의 제안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적극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ASEAN 국가들과의 FTA 협상이 중국 뜻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다. 그 이유는 ASEAN 10개국은 경제수준 및 산업구조 등이 상이함에 따라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어 모든 국가를 만족시키는 합의 도출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태국 등은 중국에 대해 개별국가 차원에서의 FTA를 먼저 체결 한 이후 이를 ASEAN 가맹국가들 전체로 확대시킬 것을 제안하였으나 중국은 이를 거부하고 ASEAN 전체와 FTA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중국제품의 유입을 우려하고 있는 필리핀과 경제 구조가 중국과 유사한 인도네시아는 이미 일본 및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를 통한 역외 국가 상품의 유입을 우려하는 의견을 제기하는 등 중국과의 FTA 체결에 소극적인 입장인 반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태국 등은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ASEAN은 일본, 한국 등과의 FTA를 동시 추진하면서 중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고 있으며 협상일정도 매우 촉박하게 잡혀있어 추진상 무리가 예상 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중국보다 1년 늦은 2002년 11월에 ASEAN 국가들과 본격적인 교섭을 시작하고 중국과의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달리 국가별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는 2002년중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다.

< 표 4-2 > ASEAN의 추진 현황

대상 지역	추진 상황
중국= ASEAN 일본= ASEAN 韓·中·日 = ASEAN	2015년까지 FTA 체결 목표 ASEAN 10개국과 개별적인 협력관계를 계획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 창설의 중장기 과제

다만 중국은 일본 또는 한국에 비해 공산당 독재체제의 특성상 특정부문의 손실에 관계없이 전체적인 국가전략에 따라 정책의 선택 및 추진이 가능함으로써 ASEAN과의 FTA 추진이 매우 유리한 입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ASEAN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농업부문의 피해에 대해서도 중국 농민의 발언권이 비교적 약함에 따라 쉽게 양보 가능하므로 FTA 체결 교섭이 용이하다. 32)

반면 일본도 집권 자민당의 지지기반인 농업이 ASEAN과의 FTA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로서 이의 반발을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며 의견조정에 장시간 소요되는 정치체제의 특성상 교섭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FTA 추진이 성공할 경우 세계 및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됨은 물론 18억의 인구를 포괄하는 자유무역지역이 형성되어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는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FTA 이외에도 중국은 홍콩, 대만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화교를 포괄하는 중화경제권의 형성을 추구함으로써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높여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최근 무역과 투자가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도 대만과의 FTA 체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 일본과 한국 등 주변국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국내 기업의 중국 및 ASEAN 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가 심화되고 경제성장률도 둔화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것으로 예상

32) 인민대표대의회의 표결시 도시주민은 1인 1표이나 농촌주민에 대해서는 4인 1표로 농민의 정치적 발언권이 취약하다.

< 표 4-3 > FTA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

(%, 포인트)

	전세계	일본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ASEAN+ 중	0.30	-0.05	-0.16	9.17	10.4	3.16	7.24	2.69	6.03
ASEAN+ 한중일	1.40	1.02	9.05	27.69	16.9	13.36	18.52	8.43	18.44

2. 한국의 자유무역 추진 내용

한국은 칠레와는 FTA가 발효 중에 있고, 앞에 설명한대로 싱가포르와 2004년 11월에 체결되었다. 그리고 2005년에는 한국과 주요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이 무더기로 체결될 전망이다.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통상 교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중 7개 FTA 협상대상 22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2004.12.12일 외교 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 중 일본과 FTA 체결을 목표로 최종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양국간 FTA가 타결되면 두 나라 산업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산품 및 농림수산물 분야의 개방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차이가 커 최종협상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또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연합과 2006년말까지 FTA를 체결한다는 목표아래 2005년부터 본 협상을 시작한다. 또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과도 2005년1월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FTA 체결을 위한 첫 협상을 갖기로 했다. 멕시코, 인도, 남미, MERCOSUR 등과는 내년 중 FTA 본 협상을 위한 사전단계인 공동연구를 벌일 예정이다.

< 표 4-4 >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³³⁾

FTA 추진 단계	상대국	추진 상황
준비 단계	미국	2005년 1월 또는 2월중, FTA 협상에 따른 쟁점 점검
산학관 공동연구	인도	2005년 중 개시에
	멕시코	2004년 10월과 12월 공동연구,
	MERCOSUR	2005년 공동연구 시작(포괄적인 통상 협정에 관한 연구)
본협상 진행	EFTA	산학관 공동연구 완료, 2005년 1월중 협상 개시
	ASEAN	산학관 공동연구 완료, 2005년 중 협상개시
	일본	2003년 12월 1차 협상, 2005년 중 협상타결목표
FTA 타결	칠레	2004년 4월부터 FTA 발효 중
	싱가포르	2004년 11월 타결, 2005년 중반부터 FTA 발효

33) 외교통사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표4-4 >를 보면 특히 멕시코는2004년 이미 두 차례 공동연구가 진행된 상태에서 2005년 중에는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2005년1월중에 미국과 FTA 체결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예비 실무협의를 갖기로 했다. 예비 실무협의를 FTA 체결을 위한 양국간 공식 협상 전에 예상되는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사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에 다발적으로 벌이는 이유는 한국이 FTA 체결 추진을 가속화 하지 않을 경우 세계 수출시장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제4절 한·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FTA

1992년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한국과 중국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는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및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한·중간 교역규모는 수교 당시인 1992년에 64억 달러에서 출발하여 2003년에는 570억 달러로 연평균 22%씩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대중 수출과 수입은 각각 연평균26.7%, 15.7% 증가하여, 동 기간 한국의 연평균 총수출·총수입 증가율인 9.2%, 8.7%를 크게 상회하였다.

한·중 교역이 급증한 것은 양국간 교역의 상호 보완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기계 및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 산업내교역이 양국 교역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1992년 이후 2003년까지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를 보여주는 <표4-5>을 보면, 수교 초기인 1997년까지는 1차 산품 및 경공업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으나, 1997년 이후 중화학제품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하였고, 특히 2001년 이후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 전기·전자제품과 기계류, 자동차 등 보다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제품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한민국 주요 수출품은 전기·전자, 섬유·의류, 농수산물, 석탄, 철강재, 화공품 등으로 과거에는 의류·직물, 농산물, 광산물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전자·IT부문 제품의 비중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

< 표4-5 > 품목별 대중국 수출입 추이³⁴⁾

(단위 : 백만 달러%)

품목	대중국 수출액	연평균증가율			대중국 수입액	연평균증가율		
	2003	1992~ 97	1997~ 2001	2001~ 03	2003	1992~ 97	1997~ 2001	2001~ 03
<1차신품>								
농수산물	182	36.7	-8.0	25.2	2,372	21.0	15.1	40.4
원유, 석유제품	1,868	30.3	2.1	4.7	1,619	57.2	4.3	20.1
기타 광산품	17	28.6	24.3	6.5	264	3.1	-42.6	22.7
<경공업제품>								
음식료품, 담배	39	20.0	16.9	46.5	202	7.0	21.5	19.3
종이 등	402	15.7	-2.6	-1.4	75	57.1	82.5	46.7
가죽 및 가죽제품	515	17.1	-4.3	-13.9	305	88.8	28.1	34.8
섬유류	2,643	17.2	-2.7	5.7	3,051	49.4	13.5	27.7
화학섬유	1,004	15.8	-11.0	4.2	428	52.4	-40.7	-9.6
기타 직물	1,380	19.0	4.7	3.5	651	0.7	0.0	12.9
의류	235	24.0	12.0	29.5	1,879	88.4	43.4	40.1
신발류	236	26.5	3.9	3.7	341	91.3	-1.0	40.2
고무 및 타이어	172	23.5	9.7	18.8	64	0.0	68.4	40.6
완구	65	21.0	-1.2	-5.7	289	79.4	24.9	37.4
잡제품	424	14.8	20.1	24.0	1,099	68.5	45.6	60.7
<중화학제품>								
전기전자제품	13,201	21.3	24.9	76.6	7,390	91.7	62.9	45.1
컴퓨터	3,883	26.0	40.5	125.4	1,537	93.3	74.2	39.7

34) 한국무역협회

무선통신기기	7,067	35.9	44.5	238.6	452	92.5	77.1	22.6
유선통신기기	105	17.4	4.9	24.4	208	93.3	78.6	66.3
가전제품	389	18.4	-7.2	42.2	635	84.4	36.3	44.4
반도체	2,955	41.7	22.5	184.2	964	95.2	62.1	54.9
기계류, 정밀기기	3,936	22.1	3.7	61.4	1,090	78.9	49.7	47.3
기계류	3,069	21.4	3.1	51.3	520	73.7	39.5	46.9
정밀기기	333	34.6	8.0	48.9	212	87.1	46.6	38.2
자동차	1,357	15.4	26.7	155.7	101	80.0	42.3	48.5
선박	24	-14.4	45.0	25.8	17	95.8	14.3	-64.7
철강금속제품	4,011	3.8	9.5	46.3	2,169	85.0	-69.2	48.6
철강 및 금속제품	2,995	1.7	9.7	46.6	1,139	85.9	-152.9	47.6
비철금속	1,016	16.7	9.0	45.4	1,030	81.6	27.5	49.9
화공품	6,390	16.3	10.4	23.1	1,458	67.3	32.0	32.4
무기화학	101	14.8	29.2	19.3	337	61.1	41.5	17.8
유기화학	3,111	16.9	21.3	30.5	480	69.3	11.4	32.5
플라스틱	2,606	16.3	3.2	15.9	234	73.1	45.1	47.9
기타 화학제품	573	15.3	9.9	22.3	407	66.9	41.4	35.4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급증에 따라 1993년 이래 지속적으로 대중국 무역흑자를 기록해 왔으며 2003년의 대 중국 무역흑자는 132억 달러에 이르렀다. 2003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같은 해 한국의 총무역수지 흑자의 88%를 차지할 만큼, 중국의 고성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어왔다. 한편 지속적인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중국 측의 불만요인이 되어왔고 작은 반덤핑조치를 초래하는 등 양국 간 통상마찰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되어왔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지속적인 관세인하를 추진하여 평균 관세율은 2001년 1월 15.3%였으나 2004년 1월까지 10.4%로 인하하였다. <표 4-6>참고. 그러나 아직도 품목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농산물에서 평균 16.8%로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산품에서는 운송장비가 15.9%, 섬

유 · 의류가 15.2%로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2001년 WTO 가입이전 관세 100%에서 첫해에 43.8%로 낮추었고, 2006년 7월에는 25%로 인하할 계획이다. 한편 2003년 4월 중국의 정보기술협정 (ITA) 참가가 승인됨으로써 IT 기술제품은 2005년에 관세철폐를 하게 되어 있다.

< 표4-6 > 한국의 산업별 대중국 무역수지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전체	1차산품	공산품	경공업	중화학		기타
					전체	IT제품	
1990	-1,683	-906	-777	-338	-440	80	-519
1991	-2,438	-1,391	-1,047	-406	-641	81	-722
1992	-1,071	-1,702	630	-298	928	66	862
1993	1,222	-1,679	2,902	34	2,868	156	2,712
1994	740	-1,844	2,584	196	2,388	142	2,246
1995	1,743	-1,399	3,141	560	2,581	84	2,497
1996	2,838	-1,958	4,797	1,252	3,544	92	3,453
1997	3,455	-2,673	6,128	1,543	4,585	215	4,369
1998	5,460	-1,594	7,054	1,713	5,432	174	5,167
1999	4,818	-1,856	6,673	1,542	5,131	59	5,073
2000	5,656	-2,844	8,500	1,472	7,027	686	6,341
2001	4,887	-2,826	7,713	875	6,839	565	6,273
2002	6,354	-3,603	9,958	-21	9,079	3,553	6,426
2003	13,201	-4,289	17,490	-337	17,827	6,102	11,725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지속적인 관세인하를 추진하여 평균 관세율은 2001년 1월 15.3%였으나 2004년 1월까지 10.4%로 인하하였다. 표<4-7> 참고. 그러나 아직도 품목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농산물에서 평균 16.8%로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산품에서는 운송장비가 15.9%, 섬유·의류가 15.2%로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2001년 WTO 가입 이전 관세 100%에서 첫해에 43.8%로 낮추었고, 2006년 7월에는 25%로 인하할 계획이다. 한편 2003년 4월 중국의 정보기술협정(ITA) 참가가 승인됨으로써 IT 기술제품은 2005년에 관세철폐를 하게 되어 있다.

<표4-7>중국의 관세율 조정추이³⁵⁾

연도	평균관세율(%)	평균인하율(%)	조정대상품목
1992. 12	43.2	-	2,898
1993. 12	35.9	16.8	3,371
1996. 4	23.0	35.9	4,900
1997. 10	17.1	26.0	4,874
1999. 1	16.7	2.4	-
2000. 1	16.4	1.7	-
2001. 1	15.3	6.6	3,462
2002. 1	12.0	21.5	5,332
2003. 1	11.0	8.3	3,000
2004. 1	10.4	5.4	2,414

35) 외교통상부 2004년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왔으나, 외국기업들은 아직도 중국이 농업, 서비스부문과 지적재산권 보호, 투명성 등에서 문제가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USTR 2003). 한국기업들도 WTO 가입 이후 대대적인 무역 및 투자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많은 비관세장벽을 유지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2004년 초에 실시한 비관세장벽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비관세 장벽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선적 전검사, 운송관계 및 항만이용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중국이 제1의 비관세장벽 경험국가로 지목되었다(<표4-8> 참고). 특히 수입허가제도·할당제도 등의 수량규제조치 이외에 강제인증제도(CCC)등의 각종 기술표준을 통한 수입규제,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등 중국의 수입 규제조치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 4-9> 참고)

<표4-8> 유형별 주요 비관세장벽 경험 국가³⁶⁾

(단위: %)

유형	1위	2위	3위	4위	5위	기타
통관문제	중국 (48.2)	미국 (8.0)	브라질 (4.0)	인도 (4.0)	나이지리아 (2.2)	기타 (33.6)
선적전검사 사전영사확인	이란 (13.6)	사우디 (9.7)	UAE (8.8)	방글라데시 (7.6)	이집트 (5.5)	기타 (54.8)
기술장벽	중국 (21.6)	미국 (11.1)	일본 (5.6)	apr시코 (4.6)	EU (4.3)	기타 (52.8)

36) 한국무역협회 2004년 1월

원산지제도	중국 (17.9)	미국 (13.1)	멕시코 (8.3)	중동 (6.5)	사우디 (5.4)	기타 (48.8)
수입규제 수량제한	중국 (30.7)	미국 (24.7)	EU (5.3)	터키 (4.7)	이란 (4.0)	기타 (30.6)
운송관계 및 항만 이용	미국 (45.1)	중국 (17.2)	중동 (6.6)	파키스탄 (2.5)	UAE (2.5)	기타 (26.1)
대금지급 및 외환규제	중국 (21.3)	이란 (18.0)	이집트 (6.6)	베네수엘라 (4.9)	인도 (4.9)	기타 (44.3)
관세평가 및 수수료	중국 (27.4)	브라질 (9.4)	인도 (8.5)	터키 (6.0)	중동 (4.3)	기타 (44.4)
수입권한 자격제한	중국 (58.2)	이란 (5.5)	인도 (5.5)	미얀마 (5.5)	말레이시아 (3.6)	기타 (21.7)

<표 4-9> 한국기업이 본 중국의 주요 비관세장벽 유형³⁷⁾

유형	건수	내용
수입규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권한 제한 - 자동차, 석유제품 등 12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 규제 - 자동차, 석유제품 등 8개 품목에 대한 수량 규제 - 관세할당제도, 수입대체정책
통관절차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세운송 제한 - 관세부가가격의 불합리한 산정 - 수입신고기간 제한 및 지체금 부과 - 통관절차의 복잡성, 비일관성 - 세관의 짧은 통관시간으로 통관 지연

37) 한국무역협회 2002년 11월

반덤핑/ 상계관세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반덤핑조례의 WTO 협정과의 부합성 여부 - WTO 가입 전 반덤핑 조사의 불투명성, 절차의 공정성 문제
보조금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문제
원산지규정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 특혜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구매사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제한 - 중국산 제품의 우선 사용
기술장벽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인증제도(CCC마크)실시 - 각 지역별 표준 및 검사기준 상이 - 수입 제조물품의 품질허가 인증 의무화 - 육류수입에 있어 검역상의 과도한 장애 - 중국 라벨승인법의 적격성 문제 - 유전자 조작식품 라벨링제도의 불투명성 - 수입제조물품의 품질허가(Quality Licenses) 인증 의무화 및 전자 제품에 대한 중복인증제도 - 침엽수 팔레트 포장재에 대한 과도한 열처리 증명서 요구 - 과도한 화장품 상표검사 비용
지적재산권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침해 관행 지속 - 저작권 관련 석외안건 관할 제한 - 특허 침해사건에 대한 당사자간 사전협의 의무화 - 저작권 침해사건 처리에 있어 지방보호주의 관행
투자장벽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및 휴대폰의 로컬콘텐츠 요구 잔존 - 승용차 도·소매업 외상 투자 제한
환경규제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품 최초 수입등록제 실시 - 감시 화학품 목록 지정 - 毒으로 전환되기 용이한 화학품 수입 규제 - 오존층 파괴물질 수입 금지 -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 - 폐플라스틱 수입 규제
경제정책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산업에서의 국유기업 독점 - 지방보호주의 존속에 따른 마케팅 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01년에 한·중·일 3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한국기업은 일본보다는 중국의 비관세장벽이 더 높다고 느끼고 있다, 중국기업은 일본보다는 한국에 대해 비관세장벽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4-10>참고). 한편 일본기업도 중국의 비관세장벽이 한국보다 더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4-10> 한·중 비관세장벽에 대한 각국 기업의 평가

분야	구분	중국		한국	
		일본기업	한국기업	중국기업	일본기업
제도적 측면	수입제한과 쿼터	3.00	3.16	2.90	2.26
	복잡한 관세 및 무역행정	3.05	2.83	3.54	2.41
	위생 및 검역검사	3.05	3.30	2.77	2.53
	기술장벽	3.00	3.09	2.61	2.64
	면허	2.63	2.85	3.09	2.64
정부 정책적 측면	정책 부재	3.17	3.42	3.34	2.63
	보호주의	3.38	3.32	3.57	2.75
	복잡한 정부구조	3.03	2.94	3.66	2.64
	느린 행정처리	2.97	2.76	3.93	2.39
	불공정 및 부패	2.66	3.05	3.54	2.30
사회 문화적	문화적 차이	2.82	3.37	3.21	2.70

측면	비즈니스 관행 차이	2.89	3.24	3.53	2.93
	언어장벽	3.08	3.18	3.32	2.60
	정보 부재	3.47	3.45	3.53	2.84
	문화적 배타성	2.88	2.72	3.03	2.64
	단순평균수치	3.01	3.11	3.30	2.59
	2개국 평가치의 단순평균	3.35		2.94	

한·중 양국간에는 서로 상대국의 무역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집중하는 등 통상 마찰이 증가해왔다(강문성 외 2003). 중국은 1997년 반덤핑 법 제정 후 총 30건의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한국은 현재 19건의 반덤핑 조사 및 규제를 받고 있어서 중국 최대의 반덤핑 규제대상 국이다. 연도별로는 2000년 3건, 2001년 5건, 2002년 9건 등으로 규제가 강화되다가 2003년 3건, 2004년 5월까지 2건으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경제의 호전으로 국내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수입가격이 상승하여 수입규제의 실익이 줄어든 점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긴축정책을 실시하면서 수입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수입품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2005년부터는 다시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의 FTA 창설 연구 제안은 중국정부 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되지 않았고, 단지 중국WTO 가입을 우려하는 ASEAN으로부터 지지를 바다아내기 위한 중국의 외교성 제안일 것이란 점을 들어 막상 중국이 WTO를 가입하게 되면, ASEAN과의 FTA에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왜 ASEAN을 첫 FTA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ASEAN FTA 초기 논의에 참여했던 Zhang(2003)은 “중국학자로서의 나의 대답은 항상 간단하다. 왜냐하면(다른 지역과의 FTA보다) 더 쉽기 때문이다”고 답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 간단한 답은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현재의 여건하에서 동아시아 협력을 전망할 때, 단시간내 동아시아 FTA를 실현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비록 동아시아 FTA가 중·ASEAN FTA가 중국에게는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ASEAN과의 FTA가 동아시아 FTA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중국과 ASEAN은 무역과 투자 등에서의 경제관계가 심화되었으며, 양 지역간 FTA는 이러한 관계를 보다 발전시키고, 이로 인한 큰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중국과 ASEAN은 경제통합과 지역협력에 있어 유사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 양측 간 협상 타결도 용이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ASEAN FTA는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양측은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협력 강화를 리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Cao(2002)는 중국의 FTA 정책 목표를 잘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적인 경제블록화 확산에 대응해야 하고, 다자간 협력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FTA를 활용하고 있으며 FTA의 순기능, 즉 FTA 체결로 무역 및 투자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고, 경제위기시 회원국간 협력으로 조기 위기극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그는 중국의 FTA 정책이 일본을 견제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중국과 같은 개도국은 경제능력, 발전단계 및 정책목표 등을 기초로 무역과 투자 확대 및 산업구조 조정을 위해 FTA를 추구하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이들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경제패권, 주도권을 획득하는데 보다 큰 의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세계 10위 무역대국이면서 높은 경제성장의 지속으로 20-30년 후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중국은 지역주의 확산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이 양자간 FTA를 추진하고 있음으로 동북아에서 중국만 고립되는 상황을 통상정책 수립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FTA를 통한 경제적 동맹관계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은 WTO 가입 후 지역적 통합과 협력에 참여하는 실험이 필요하며, 이런 차

원에서 ASEAN이 그 대상지역으로 선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 지도부는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의 경제를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고, 경제개혁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FTA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중국은 세계 주요 무역대국으로 부상하였다. 2002년 현재 세계 제5위이며, 총 대외무역 규모는 1986-2002년 사이에 1000억 달러에서 60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무역의 성장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가능했다. 중국 지도부는 개방과 성장 사이에는 명백한 연계가 있다는 점과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이익을 인식하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이후 FTA에 대해 중국은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의무사항 거의 대부분을 이행하게 되고, 대외통상정책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2004년 ASEAN과의 FTA 타결로 경제통합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게 되어 FTA 추진에 보다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한·일 FTA 협상이 진행되고, 범미주지역 FTA인 FTAA가 출범하게 되면, 이에 대한 대비 차원의 정책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DDA 협상 부진에 따른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5절 한 ·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문제점

한·중 FTA 체결은 무역 및 투자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역내국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으나 부정적인 효과도 수반한다. FTA 체결의 영향으로 경제전체적으로는 이익을 보더라도 농업부문처럼 업종에 따라 손실을 입는 계층이 있을 수 있다.

FTA 체결 자체가 체약국간 무역자유화를 의미하므로 경쟁력이 취약한 기존 국내 생산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물론 한·중 양국은 그나마 어느 정도의 종속적이 아닌 대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제할 수 있다고 본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한계와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조건의 차이

한 지역에서 경제권을 형성하거나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 지리적 인접성, 정치제도 및 정책방향의 일치성, 국가의 규모, 인구의 크기, 경제발전 수준 및 경제력의 유사성이 존재 했을 때 바람직하다고 경제통합의 일반적 모형에서 설명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공동경제권을 형성하기에는 국가의 규모, 경제발전의 정도, 인구 부포 등의 격차가 너무 크며,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데에 소요되는 비용도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양국 국가 간의 경제발전 수준 및 경제력에 심각한 격차가 존재함으로써 경제권 형성의 이익이 역내 기술이 앞선 나라로 집중되거나 역내 경제교류가 비대칭적 의존관계를 유발시킬 위험이 있다. 실제로 공업부문에서의 발전 및 경쟁력의 격차가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역내 제국간 생산구조 및 시장수요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역내국가간의 경제력 격차가 산업구제의 의질성에 기인한다면 상호보완적 결합 메카니즘을 통해 동태적으로 개선 할 수 있으나, 동일산업 내에서 구조적 경쟁력의 격차가 커서, 역내 제국간 생산구조 및 시장수요에 있어서 비대칭적 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상의 비대칭성이 지역규모의 상호의존적 경제권 형성의 주요한 기능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계적이고 국지적인 경제권 형성이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2. 산업발생의 고착화

양국간의 산업발전의 격차로 인한 산업발생 고착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

히, 중국의 경우 현시점에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에 비해 기술적으로 뒤쳐진 저차원산업에 대한 고착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무역불규형과 함께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무역수지의 편중이 거론되어 한국의 경우 무역수지가 균형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경우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각국 산업에 대한 체질변화를 발생시켜 오히려 산업기술에 대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동태적 효과로 볼 때 외국인 기업들의 역내진입과 역내교역 증가로 인하여 이에 상응하는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다.

3. 경제체제의 이질성

사회주의 계획경제권과 자본주의 시장경제권간의 경제협력체 형성은 양 체제가 추구하는 경제이념 및 경제운영원리의 근본적 차이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장경제권의 대외무역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민간기업에 의해 실행되며, 계획경제권의 대외 무역은 국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조달의 일환으로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따라서 양자간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결속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시장경제권의 경제활동은 시장 메카니즘이 작용하고 기별이윤이 확보되는 곳에서는 자생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으며, 국가간의 경제권 형성은 이러한 경제활동의 영역을 넓혀주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중앙 계획형 계획경제권에 대해서는 이러한 확산이 인위적으로 통제됨으로써 경제권 형성의 근본취지가 무실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한-중 양국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경제운영체제의 차이는 한-중 지역경제권 구상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4. 한 · 중 양국간 무역 불균형 심화

한 · 중 양국간 무역은 종속적인 경제구조와 산업 · 기술협력의 부진 등으로 구조적 불균형 상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경공업부문의 공업화 초기 단계에서 중간재를 한국에서 수입함에 따른 대한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중국은 순차적으로 동일한 산업발전 패턴을 보이면서 공업화를 추진 해왔다. 한국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섬유산업에서, 1980년대 이후 전자, 자동차 등을 육성하였고, 중국은 1980년대 섬유산업에서, 1990년대 전자,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기술발전 속도가 완만해지고 한국의 산업구조조정이 지체되면서 세계시장에서 한·중의 경쟁관계가 심화되는 상태가 되었다. 21세기 세계경제는 정보화, 서비스화 시대로 점차 전화되고 있는데 반하여 한·중의 산업은 전통적 제조업에 치중하고 있어, 국제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양국 모두가 중장기적으로 교역조건 악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들 양국의 자유무역협정 성사에는 이 같은 구조적 무역불균형을 어떻게 시장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제5장 한국과 중국 FTA의 주요쟁점과 추진과제

제1절 한·중 FTA의 주요쟁점

한·중 농산물 교역의 특징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수출하고 한국은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구조로, 제조업과 달리 산업내무역의 확산을 통한 FTA의 이익공유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약 없는 FTA 체결 시 많은 품목에서 일방적인 중국의 수출 확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은 네 가지로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첫째, 중국동북부지방은 한국과 유사한 농산물의 작목구조 및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내 농산물시장에서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제적 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의 가격경쟁력이 한국을 압도하고 있어 일방적인 교역구조가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지리적 인접성으로 농산물 신선도 유지에서 타경재국에 비해 적대적인 우위에 있다.

넷째, 중국의 경제규모가 우리를 크게 상회하여 규모의 효과를 보이면서 일방성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요인이 서로 상승작용을 통하여 국내 농업시장을 잠식할 경우 한국 농가에 커다란 충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무역지수 분석에 의하면 농업 내부에서 상호 협력적 발전모형을 구축하는 데 한계성이 있다. 따라서 FTA 체결 시 일방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만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나 농업의 특성상 농업인력 및 토지 등 자원이 타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가능성은 별로 없다. 따라서 FTA 체결 시 완전 농업 개방에 집착하는 경우 정치적

리스크 및 사외보장성격의 농민지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결국 FTA 타결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FTA를 통한 국민경제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탄력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한·중 FTA가 농업분야에 초래할 경제적 결과는 WTO 다자간 협상에서 국제적으로 타결될 시장개방의 폭을 크게 상회하면서 중국에 예외적이고 일방적인 이익을 발생시켜 다자주의 국제통상질서하에서 한국시장 접근을 추진하는 기타 국가의 이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적극 강조하여 중국의 요구조건을 낮추는 협상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한국은 중국 농업제품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고품질화로 소비자의 국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유지시키는 구조조정전략, 즉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차별화전략이 중장기적으로 요구된다. FTA는 양자간 무역자유화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정치적과정의 특성을 갖는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이익극대화도 중요하지만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등 부문내에서의 협력증대와 이에 따른 이익확대가 FTA의 정치적 성공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중 농업부문 교역에서 품목별 상호 보완성을 가질 수 있는 가공식품분야의 양국간 협력모델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제2절 한·중 FTA의 추진과제

RCA 지수와 무역특화지수의 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한·중 양국은 기술력 격차에 따른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본·기술집약적인 부문에, 중국은 노동집약적인 부문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 체결 시 한국의 경우 자본·기술집약적 산업 및 생산 공정으로 자원 집중이 유도되어, 산업구조의 고도화 또는 고부가가치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한국보다 기술력이 뒤져 있지만 거대한 잠재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

국과의 FTA 추진은 중국의 성장을 활용하여 한국 산업구조의 고부가 가치화를 이룬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보다 기술력이 뛰어난 일본과의 FTA가 추진되고 있고 향후 거대선진국과의 FTA가 고려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 일본 등 선진국에 대해 비교우위부문인 저부가가치산업에 특화하여 산업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을 일정 부문 상쇄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한·중 FTA의 필요성도 FTA 추진 시 강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한·중 FTA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는 필연적으로 한국의 저부가가치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의류, 목재가구, 비금속광물제품, 기타 제조품 등에서 한국이 비교열위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부문의 생산규모가 축소되어 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대응하는 것이 원만한 FTA 추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FTA 체결에 따른 상품교역의 자유화 및 원활화는 무역이 과거보다 수월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교역 창출을 촉진시키는 한편, 보다 많은 교역 창출을 위한 투자 창출도 촉진하는 양면 측면을 가진다.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서 특히 자본축적으로 인한 동태적 이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FTA 체결은 역내시장에 대한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제도의 투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역내에 생산거점을 확보하여 확대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발한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제1위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지만, 향후 FTA 체결 시 투자환경의 개선으로 대중국 투자의 증가가 가속화될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또한 한·중 FTA 체결로 중국 또는 다른 국가로부터의 대한국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FTA가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있고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고 아직 보편화된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FTA가 FDI에 미치는 영향은 FDI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고 이해된다. 현지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 목적을 가진 수평적 또는 시장 추국형 FDI는 주로 관세, 비관세, 운송비용 등을 포함하는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행해진다, 따라서 FTA를 통

해 거래비용이 낮아지면 수출이 FDI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기 때문에 역내국
가로부터의 수평적 FDI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수직적 또는 비용절감형
FSI는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공정 별로 생산기지를 다른 국가에 두는 FDI를
가르키며, FTA가 체결되면 관세가 철폐되어 거래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직적
FDI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시장추구형 FDI와비용절감형 FDI가 혼재되어 있으나, 최
근의 추세는 단순히 중국의 낮은 임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비용 절감형 FDI에서 중
국 내수시장 진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시장추구형 FDI가 늘어나고 있다. 수
평적 FDI의 경우 중국이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수출 대체형(tariff- jumping) 직접투자가 이루어져왔던 경우는 FTA 체결로 관세
가 철폐되면 대중 직접투자가 감소하고 대신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형태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는 FTA의 체결이 해외투자보다는 국내투자를 증대
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FTA 체결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로 인해 시장에서의 기술거래가 보
다 안정적으로 가능해지면, 기존의 직접투자를 라이선스 공여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 중 FTA 체결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비용이 낮아지기 때
문에 수직적 또는 비용절감형 FDI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즉 한 중 FTA의 체결은 중국진출 한국기업이 한국에서 더 좋은 품질의 원재 및
부품을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대중국 투자의 효율성과 채산성
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 실제로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에
대한 연구에서는 기업의 매입 중 한국으로 부터의 매입비율은 기업의 매출이익률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TA의 체결은 중국의 대한국 투자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중국으로부터의
투자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의지가 계속 증강하고 있
고, 중국 정부의 挑出法 전략의 실시에 따라 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한 제한도 점
차 감소하고 기업의 해외시장 · 자원개발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있으므로 중국

의 해외직접투자는 향후 매우 큰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2003년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대상국 중 4위를 차지하여 중요한 해외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제조업, 특히 IT산업은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한국이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중국시장의 접근성을 목적으로 보다 선진적인 경영환경을 가진 한국으로의 외국인 투자유입이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증가의 가능성과 형태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서 대중국 투자의 급증으로 인한 산업공동화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한 연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국내기업이 고부가가치산업과 생산공정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추세가 가속화되면 산업공동화와 고용 문제의 악화로 경제성장 부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우려해야 할 상황은 한편으로는 저부가가치부문의 중국 상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부가가치산업이 중국으로 급속히 이동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FTA의 체결후 대중 투자의 확대와 함께 국내 생산을 동시에 확대시키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6장 결 론

세계경제가 세계화와 더불어 지역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급변하는 세계경제에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외부경제로부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타국가와 공동 대응하여 블록화된 경제지역으로부터의 불합리한 경제적 조치에서 한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FTA 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미 칠레와의 FTA를 협상으로 지역블록을 형성하고 있지만 시아나 세계 중요시장인 중국과의 FTA 체결도 신중히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도 비록 거대한 내수시장, WTO의 가입으로 인해 국내 시장이 한층 개방될 것이고 경제가 지속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역경제에서의 통합도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아세안과 FTA 체결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동아시아에서 교역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역시 FTA 체결대상으로 지정되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는 수교 10년 이래 양적으로 급팽창하였으며 중국의 고도성장은 그 동안 한국기업들에게 많은 수출 및 투자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입은 여타 지역에 대한 수출입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양국은 서로에게 미국, 일본 다음가는 3대 교역파트너로 성장하였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 10여년 동안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 측의 우려를 자아내어 최근 마늘분쟁이나 한국상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등 통상 분쟁이 격화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한국기업들이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 등 경쟁우위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통상 현안이 전체적인 통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한 대중 통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간 해외 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향후 해외시장에서 중국의 위협은 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중 경제교류의 윈윈게임을

이루기 위한 전제는 중국을 글로벌 경쟁 환경 아래에서의 긴밀한 협력자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런 교류를 바탕으로 한중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또한 중국이 WTO 가입함에 따라 중국의 경제개방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서비스 영역을 개방함은 물론 시장진입에 장애가 되는 많은 규제조치가 취소될 것이며 국제적 관례에 따라 투자 및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등 한국을 포함한 외국투자자들에게 더욱더 많은 상업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 또한 농산품 시장 개방, 무역보호 조치 철폐, 무역균형 유지 등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중한 양국간의 장기적 협력과 역내 실질적인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대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중국이 높은 관세를 무기로 보호하고 있던 자동차, 화학, 전자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관세인하가 이루어지고 각종 비관세세 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대중 흑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양국간의 통상마찰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며 중국은 한국 공산품 수출에 대한 반덤핑 제거나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 역시 강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일본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동아시아 경제 질서도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절대규모에서는 중국의 GDP가 일본의 GDP에 미치지 못하지만 일본경제가 향후 10여년간 3%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회복하고 중국의 RUDWPO성장률은 향후 10여년간은 평균8%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또 일본의 수입수요나 총수요 증가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므로 중국이 계속 대외무역을 확대해 나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일본을 제치고 동아시아 중심국으로 등장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이끌어 나갈 주도자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으로 전환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양국간의 지리적 인접성과 산업의 보완성이 향후 한중 윈윈게임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므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 지대 설립의 추진을 필요한 것이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상호간에 FTA, 덤 과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FTA를 체결하지 않음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의 FTA 체결은 역내 각국의 기타 다자간 협력에 있어서의 지위와 역할을 향상시키고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며 아시아를 제외한 기타 선진국의 역할을 견제하여 지역간 균형 및 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물론 단기간에 실현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단기적으로 자유무역지대 체결은 양국에 무역수지적자를 가져오지만 산업별 영향은 중국은 산업구조 개편이 일정시기 동안 지속될 것이고 산업구조가 전환기를 맞이하는 이때 중국과 한국의 산업협력도 강화될 것이다.

또 양국의 제도적 차원에서의 강제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보다는 시장 원리에 의한 자연적 통합을 촉진하는 여건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보문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즉 산업부문별로 협력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기술협력 및 자본 협력방안의 논의 및 추진이 이루어지고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협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양국 정부차원에서 지역통합 체결을 위해 정치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양국의 정치, 경제면에서의 여건조성을 마련해 줄 필요도 있다.

중국과 한국의 자유무역지대 설립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설립을 위한 모든 준비가 갖춰졌을 때만이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여건들이 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광노성, “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 농산물시장의 개방: 경제학적 근거와 추진전략”, “우리나라 중장기 FTA 추진전략” 세미나(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경련 공동주최), 한국무역협회, 2001.
- 김영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디지털시대 한·중·일 산업협력방안” 세미나 자료집, 삼성경제연구소, 2001.
- 김익수, “중국의 WTO 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 김의주,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경제와 한·중 경협에 미치는 영향”, 정책연구 95-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 김태정 외, “한국의 소규모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1996.
- 김혜민, “韓日 FTA가 韓國의 각 産業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 남덕우 외, “전문가 10인의 한국경제를 보는 눈”, 삼성경제연구소, 서울, 2002.
- 박명호, 박순찬, “한·중·일 무역자유화의 후생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번순,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연구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2001.
- 박순찬, “한국 FTA 추진의 전망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박지달, “자유무역협정의 산업별 파급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신동천, “국제무역의 연산균형분석”, 世經社, 서울, 1999.
- 안충영·이창재 편 “동부아 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박영사, 2002
- 오용석, “중국경제의 구조개혁 평가와 중장기 발전전망”, 한국비교경제학회

- 2002년도 정기 학수발표대회, 한국비교경제학회, 2002.
- 유진석, “중국 경제 · 산업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2002.
- 이홍식 · 이종화 · 신관호 · 왕윤종 “한 · 중 · 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에 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정영록, “떠오르는 중국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2001.
- 정인교,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 추진전략”, “우리나라 중장기 FTA 추진전략” 세미나(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경련 공동주최) 자료집, 한국무역협회, 2001.
- 정인교, “한 · 중 · 일 FTA의 필요성과 한 · 중 · 일의 입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자유무역협정정책자료센터 한-중-일 FTA 연구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정인교, “한 · 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및 意義”, 대외경제정책연구 Vo1.3, 4: pp. 115-13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 정인교, “APEC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정책연구 96-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 정인교 외, “WTO 무역자유화의 일반균형효과 분석”, 정책연구 96-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 조용균, “중국의 WYO 가입에 따른 개방화와 국제무역질서의 변화”, 외교안보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최낙균, “대외통상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우리나라 중장기 FTA 추진전략” 세미나(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경련 공동주최), 한국무역협회, 2001.
- 최세균 외,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2

웹사이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http://www.koreaemb.org.cn>

중국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산업경제연구소 <http://www.cmcost.or.kr>

LG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부 록

- (1) **Food** Paddy rice; wheat; Cereal grains nec; Vegetables, fruit, nuts; Oil seeds; Sugar cane, sugar beet; Plant-based fibers; Crops nec; Cattle, sheep, goats, horses; Animal products nec; Raw milk; Fishing; Meat; cattle, sheep, goat, horse; Meat products nec; Vegetable oils and fats; Dairy products; Processed rice; Sugar; Food products nec; Beverages and tobacco products.
- (2) **Wap** Wearing apparel.
- (3) **Tex** Textiles
- (4) **Pchm** Petroleum, coal products; Chemical, rubber, plastic products.
- (5) **Prst** Ferrous metals; Metals nec; Metal products;
- (6) **Motor** Motor vehicles and parts.
- (7) **Ele** Electronic equipment.
- (8) **Mup** Machinery and equipment nec.
- (9) **OthMnfcs** Other primary production Wool, silk-worm cocoons; Forestry; Coal; Oil; Gas; Minerals nec; Leather products; Wood products; Paper products, publishing; Mineral products nec; Transport equipment nec; Manufactures nec.
- (10) **Suces Services and activities NES** Electricity; Gas manufacture, distribution; Water; Construction; Trade; Transport nec; Sea transport; Air transport; Communication; Financial services nec; Insurance; Business services nec; Recreation and other services; PubAdmin/ Defence/ Health/ Educat; Dwellings.

ABSTRACT

An Analysis of
the Economic Effect of Trade Agreement
with China and Korea

Yan Long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conomic effect resulted from conclusion of FTA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These days multilateralism and localism coexist and prosper in the world economy, and localization through local trade agreement is deepening. After East Asia's economic crisis, integration trend of the regional economies are getting obvious in Northeast of Asia, too. Especially, Korea and China, which have not yet concluded even one FTA agreement despite being WTO members, came to make share plans of joining multilateralism. Although there is a discussion about FTA of Korea with China and Japan. But the conclusion of FTA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also important. Thus, I would like to progress the study of FTA between Korea and China. Korea's economy developed due to trade. Korea, whose reliance on trade is high, can confront a new turning point throughout the conclusion of FTA agreement. Especially, if Korea and

China conclude an FTA agreement, both countries can get more profits from their partners than other areas, because the size of trade between two countries is growing more and more, and proportion of trade is high to each other since China's reformed and open.

In order to analyze how FTA between Korea and China influence on each other, I used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which is based on the database information of GTAP Version 5, and examined the macro economic effec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conclusion of FTA is tariff, that is to say, to revitalize trade by abolishing tariff or phaseout of tariff throughout negotiation. Considering sensitive part, I classified both countries' industries to more than 10 subdivided parts to study in this thesis. Actually, the most sensitive field of both countries' industries is agriculture. In case that both countries lower the tariff by 100%, Korea and China each has profitable parts and loss parts together.

This thesis show that positive effect and negative effect coexist at the same time when the tariff is cut down. However, it indirectly show that social welfare's increase and economic expectation effect accompany GDP increase and improvement of terms of transaction, and it also shows that the trade barrier between Korea and China need to be deregulated or abolished. It was indicated that if both countries conclude FTA agreement to abolish tariff, the levels of both countries' welfare go up. Therefore, G011 increase and terms of transaction are improved. Based on industrial classification, in China the trade balance of agriculture varies the most, and in Korea the textile and petrochemical industries have the most changes in the trade balance. Although statical analysis has a limit, we can learn that if both

countries conclude FTA agreement, the trade between them increases and get advantages in the complementary fields throughout each country's superiority. However, for FTA agreement can not be concluded in short term, both countries should actually consider a lot of other things following this subject and have many problems to solve.

I think that, based on this conclusion, both Korea and China should actively progress actual examination about conclusion of FTA agreement to join multiaterlism sooner or later, and should cope with the changes of world economy and multilateralism.